

## 소상공인 지원정책 유형별 분석

2017. 12

# 제 출 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소상공인 지원정책 유형별 분석』 과제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 12

중 소 기 업 연 구 원  
원장 김 동 렬

## 연구진

---

연구책임자 백 훈 연구 위원  
공동연구자 최 은 식 연구 원  
공동연구자 정 완 수 연구 원

## 목 차

<b>제1장 서론</b> .....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연구범위 및 방법 .....	2
<b>제2장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기준</b> .....	3
1. 소상공인지원사업의 대상범위 설정 .....	3
2. 지원사업 조사 프로세스 .....	3
3. 지원사업의 산출방식 .....	4
<b>제3장 소상공인 정책의 유형별 분류기준</b> .....	5
1. 회계유형 및 지원형태별 .....	5
2. 기능별 분류 .....	7
3. 생애주기별 .....	8
4. 정책대상별 분류 .....	8
5. 정책속성별 분류 .....	8
<b>제4장 소상공인 정책의 유형별 현황</b> .....	16
1. 개요 .....	16
2. 유형분류별 현황 .....	19
<b>제5장 중앙·지자체간 소상공인 정책 전달체계 및 정책과제</b> .....	39
1. 정책 연계성과 유사·중복성 문제 .....	39
2. 기업생태계적 전환의 필요성 .....	40
3. 정책의 연계성 분석 및 시사점 .....	41
<b>&lt;부록&gt; 복합적인 주요 유형분류별 현황 : 2017년 기준</b> .....	45

## 표 목 차

<표 2-1>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범위 기준 .....	3
<표 2-2> 소상공인 지원사업 조사 프로세스 .....	4
<표 2-3> 소상공인 지원사업 산출방식 .....	4
<표 3-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의 차이 .....	6
<표 3-2> 예산 관련 소상공인 정책의 기능별 분류 기준 .....	7
<표 3-3> 협력형·독자형·병렬형정책의 개념과 차이 .....	9
<표 3-4> 매칭분담·독자담당정책과 협력형·독자형·병렬형정책간 관계 .....	10
<표 3-5> 정책목표에 근거한 소상공인 지원정책 유형 .....	13
<표 3-6> 행정적 성격에 근거한 소상공인 지원정책 유형 .....	15
<표 4-1> 예산규모로 본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소상공인 정책 역할분담 .....	16
<표 4-2> 중앙부처의 소상공인 사업 관련 예산 및 사업수 현황 .....	17
<표 4-3> 지자체의 소상공인 사업 관련 예산 및 사업수 현황 .....	18
<표 4-4> 회계유형별 예산 분포(금액기준) .....	19
<표 4-5> 회계유형별 예산 분포(건수기준) .....	20
<표 4-6> 지원형태별 예산 분포(금액기준) .....	21
<표 4-7> 지원형태별 예산 분포(건수기준) .....	22
<표 4-8> 기능별 예산 분포(금액기준) .....	23
<표 4-9> 기능별 예산 분포(건수기준) .....	24
<표 4-10> 생애주기별 예산 분포(금액기준) .....	25
<표 4-11> 생애주기별 예산 분포(건수기준) .....	26
<표 4-12> 생애주기 및 기능별 분류에 따른 전체 예산 및 사업수 분포 현황 .....	27
<표 4-13> 생애주기 및 기능별 분류에 따른 전체 예산 및 사업수 분포 현황 .....	28
<표 4-14> 생애주기 및 기능별 분류에 따른 전체 예산 및 사업수 분포 현황 .....	29
<표 4-15> 생애주기 및 기능별 분류에 따른 전체 예산 및 사업수 분포 현황 .....	30
<표 4-16> 정책대상별 예산 분포(금액기준) .....	32
<표 4-17> 정책대상별 예산 분포(건수기준) .....	34
<표 4-18> 매칭·독자담당형 분류에 따른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	35
<표 4-19> 매칭·독자담당형 분류에 따른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	35
<표 4-20> 협력·독자·병렬형 분류에 따른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	36
<표 4-21> 협력·독자·병렬형 분류에 따른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	37

<표 4-22> 정책목표별 분류에 따른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	37
<표 4-23> 정책목표별 분류에 따른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	38
<표 5-1> 예산분담 또는 실행주체에 따른 정책의 특성 .....	39
<표 5-2> 정책의 연계성 및 유사·중복성 평가(2017년 금액기준) .....	41
<표 5-3> 정책의 연계성 및 유사·중복성 평가(2017년 건수기준) .....	41
<부록 1-1-1> 생애주기 및 기능별 분류에 따른 중앙부처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	45
<부록 1-1-2> 생애주기 및 기능별 분류에 따른 지자체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	45
<부록 1-1-3> 생애주기 및 기능별 분류에 따른 전체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	46
<부록 1-2-1> 생애주기 및 기능별 분류에 따른 중앙부처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	46
<부록 1-2-2> 생애주기 및 기능별 분류에 따른 지자체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	47
<부록 1-2-3> 생애주기 및 기능별 분류에 따른 전체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	47
<부록 2-1-1> 생애주기 및 정책대상별 분류에 따른 중앙부처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	48
<부록 2-1-2> 생애주기 및 정책대상별 분류에 따른 지자체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	48
<부록 2-1-3> 생애주기 및 정책대상별 분류에 따른 전체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	49
<부록 2-2-1> 생애주기 및 정책대상별 분류에 따른 중앙부처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	49
<부록 2-2-2> 생애주기 및 정책대상별 분류에 따른 지자체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	50
<부록 2-2-3> 생애주기 및 정책대상별 분류에 따른 전체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	50
<부록 3-1-1> 기능 및 정책대상별 분류에 따른 중앙부처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	51
<부록 3-1-2> 기능 및 정책대상별 분류에 따른 지자체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	51
<부록 3-1-3> 기능 및 정책대상별 분류에 따른 전체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	52
<부록 3-2-1> 기능 및 정책대상별 분류에 따른 중앙부처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	52
<부록 3-2-2> 기능 및 정책대상별 분류에 따른 지자체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	53
<부록 3-2-3> 기능 및 정책대상별 분류에 따른 전체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	53
<부록 4-1-1> 정부 역할분담 및 정책목표별 분류에 따른 중앙부처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	54
<부록 4-1-2> 정부 역할분담 및 정책목표별 분류에 따른 중앙부처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	54
<부록 4-1-3> 정부 역할분담 및 정책목표별 분류에 따른 전체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	54
<부록 4-2-1> 정부 역할분담 및 정책목표별 분류에 따른 중앙부처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	55
<부록 4-2-2> 정부 역할분담 및 정책목표별 분류에 따른 지자체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	55

<부록 4-2-3> 정부 역할분담 및 정책목표별 분류에 따른 전체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	55
<부록 5-1-1> 정부 역할분담 및 기능별 분류에 따른 중앙부처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	56
<부록 5-1-2> 정부 역할분담 및 기능별 분류에 따른 지자체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	56
<부록 5-1-3> 정부 역할분담 및 기능별 분류에 따른 전체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	57
<부록 5-2-1> 정부 역할분담 및 기능별 분류에 따른 중앙부처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	57
<부록 5-2-2> 정부 역할분담 및 기능별 분류에 따른 지자체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	58
<부록 5-2-3> 정부 역할분담 및 기능별 분류에 따른 전체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	58
<부록 6-1-1> 정책목표 및 기능별 분류에 따른 중앙부처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	59
<부록 6-1-2> 정책목표 및 기능별 분류에 따른 지자체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	59
<부록 6-1-3> 정책목표 및 기능별 분류에 따른 전체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	60
<부록 6-2-1> 정책목표 및 기능별 분류에 따른 중앙부처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	60
<부록 6-2-2> 정책목표 및 기능별 분류에 따른 지자체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	61
<부록 6-2-3> 정책목표 및 기능별 분류에 따른 전체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	61
<부록 7-1-1> 정부 역할분담 및 생애주기별 분류에 따른 중앙부처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	62
<부록 7-1-2> 정부 역할분담 및 생애주기별 분류에 따른 지자체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	62
<부록 7-1-3> 정부 역할분담 및 생애주기별 분류에 따른 전체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	63
<부록 7-2-1> 정부 역할분담 및 생애주기별 분류에 따른 중앙부처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	63
<부록 7-2-2> 정부 역할분담 및 생애주기별 분류에 따른 지자체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	64
<부록 7-2-3> 정부 역할분담 및 생애주기별 분류에 따른 전체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	64
<부록 8-1-1> 정책목표 및 생애주기별 분류에 따른 중앙부처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	65
<부록 8-1-2> 정책목표 및 생애주기별 분류에 따른 지자체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	65
<부록 8-1-3> 정책목표 및 생애주기별 분류에 따른 전체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	66
<부록 8-2-1> 정책목표 및 생애주기별 분류에 따른 중앙부처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	66
<부록 8-2-2> 정책목표 및 생애주기별 분류에 따른 지자체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	67
<부록 8-2-3> 정책목표 및 생애주기별 분류에 따른 전체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	67
<부록 9-1-1> 정부 역할분담 및 정책대상별 분류에 따른 중앙부처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	68
<부록 9-1-2> 정부 역할분담 및 정책대상별 분류에 따른 지자체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	68
<부록 9-1-3> 정부 역할분담 및 정책대상별 분류에 따른 전체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	69

<부록 9-2-1> 정부 역할분담 및 정책대상별 분류에 따른 중앙부처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69  
 <부록 9-2-2> 정부 역할분담 및 정책대상별 분류에 따른 지자체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70  
 <부록 9-2-3> 정부 역할분담 및 정책대상별 분류에 따른 전체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70

<부록 10-1-1> 정책목표 및 정책대상별 분류에 따른 중앙부처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71  
 <부록 10-1-2> 정책목표 및 정책대상별 분류에 따른 지자체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71  
 <부록 10-1-3> 정책목표 및 정책대상별 분류에 따른 전체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72

<부록 10-2-1> 정책목표 및 정책대상별 분류에 따른 중앙부처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72  
 <부록 10-2-2> 정책목표 및 정책대상별 분류에 따른 지자체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73  
 <부록 10-2-3> 정책목표 및 정책대상별 분류에 따른 전체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73

## 그림 목차

<그림 3-1> 정책의 유사·중복성 평가 기본절차 ……11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국가경제의 뿌리이며 모세혈관과 같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정부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세워 사업 추진
  - 소상공인 지원은 '97년부터 소상공인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설립, 소상공인 시장기금 설치로 체계를 갖추면서 발전
  - 금융지원 → 경영개선 지원 → 인프라 지원 → 조직화와 협업화 지원의 순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 \* 소상공인법 제정('97.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설립(2014.1)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2015.1)로 지원체계 강화
  -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IMF 외환위기('97) 이후 대규모 실업 해소와 경제침체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
- 현재 5개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에서 각자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유형별 형태와 예산의 파악이 어려운 실정
  -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지원사업을 종합관리 하고자 '14년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SIMS)을 운영
    - \*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건수와 예산은 '14년 311개, 1.6조에서 '16년 375개, 2.3조원으로 꾸준히 증가
  - 하지만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한 상세한 유형별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아 별도 연구를 통한 체계적인 사업점검이 필요한 시점
-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예산규모와 내용을 파악하고 유형별 분석
  - 5개 중앙부처, 17개 광역지자체 단위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예산규모, 회계(재원), 형태, 기능, 대상 등을 유형별로 분석
    -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등록자료를 활용하되, 미등록자료는 개별 파악

-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연도별 예산 변화 추이를 통해 사업추진 경향을 파악하고 유사 또는 중복 여부 분석
- 소상공인 경쟁력과 지원사업 효율을 높이기 위한 예산구조 변경과 같이 사업 운영에 대한 정책 시사점 도출

## 2. 연구범위 및 방법

- 본 연구에서 범위는 '통합관리시스템'에 있는 내역사업 단위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 '14~'16년도 지원정책은 '16년에 실시한 기존 연구자료를 활용하고 '17년은 새로 조사하여 4개년('14~'17년)을 시계열로 분석
- 정책유형은 회계·지원형태·기능·대상·속성 등 다양한 방향으로 분류
- 정책속성의 경우는 정부의 역할분담, 정책목표, 행정성격 등으로 세분화하여 유형화
- 하나의 정책유형 기준 이외에도 '17년 지원정책은 회계유형 및 정책대상 등과 같이 두 개의 정책유형 기준을 통해서도 예산구조를 파악
-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방식과 내용 특성을 파악하여 개선방안 제시
- 정부부처와 광역지자체의 연도별 예산 변화추이를 통해 지원사업 경향 파악
- 정책의 유사 또는 중복 여부 분석을 통해 정책추진 주체 간 역할분담 점검

## 제2장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기준

- 본 연구는 2017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현황에 대한 조사로 ① 대상범위 ② 조사방법 ③ 산출방식 등의 기준 설정하여 명확한 조사 실시

### 1.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대상범위 설정

- (대상범위) ① 소상공인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② 사업명에 소상공인 명시되어 있는 사업 ③ 소상공인의 대표 업종(슈퍼마켓, 나들가게, 외식업, 숙박업, 전통시장, 프랜차이즈 등)을 기준으로 선정

<표 2-1>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범위 기준

구 분	내 용
목 적	사업 목적이 소상공인 성장, 안정, 보호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대 상	사업명에 소상공인을 대표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사업
업 종	소상공인의 대표업종인 슈퍼마켓, 나들가게, 외식업, 숙박업, 전통시장
기존사업	16년 조사사업 중 종료·변경한 사업을 제외한 지속사업

- (제외대상) 중소기업통합지원 통합관리시스템에 소상공인과는 분류기준이 다른 창업사업(공단 창업사업 제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중소기업지원사업

### 2. 지원사업 조사 프로세스

-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조사를 위해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 사업을 나누어 실시
- (공통)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과 기업마당, d-브레인들을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발굴
  - ①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안에 사업정보 중 정책지도를 활용한 지원대상별 분류기준을 토대로 순위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별
  - ② '16년 1월~'17년 11월까지 기업마당과 d-브레인들에 등록된 소상공인 공고 사업을 기준으로 상위사업인 내역사업과 연계확장으로 지원사업 선별

- (중앙부처) 18개 중앙부처의 '17년 사업설명자료와 성과계획서를 기준으로 분석하고, 내용이 부실한 내역사업은 각 부처 홈페이지와 사업담당자와 전화면접법을 통한 사업구조 및 내용 파악
- (지자체) 17개 광역지자체의 '17년 세입세출예산서 및 기금설명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하고 내용 추가를 위해 개별 홈페이지 공고사업 정보와 사업계획자료를 참고하고 e-호조 관리시스템 등록 사업설명자료 수집과 변경되거나 종료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담당자와 전화면접을 해서 사업정보 확인
- 1차 공통정보 수집 → 2차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 예산자료, 사업자료 활용 → 3차 전화면접으로 사업의 정합성 확인

<표 2-2> 소상공인 지원사업 조사 프로세스

1단계 정보수집	2단계 정보분석	3단계 지원사업 확정
<b>사업정보 수집</b> SIMS, 기업마당, d-브레인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발굴	<b>사업정보 추가 및 확인</b> 중앙부처 : 사업설명자료와 성과계획서, 각 부처 홈페이지 자료실과 공지사항 정보 분석 지자체 : 세입세출예산서와 기금설명서, e-호조 등록 사업설명자료(사업조사)들로 누락사업과 사업정보 확인	<b>사업의 정합성 확인</b> 사업담당자와의 전화 면접하여, 사업정보의 정합성 확인과 지원사업 확정

### 3. 지원사업의 산출방식

- 소상공인 지원사업 현황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지원사업 산출 시 ①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 사업수 중복 제거(지자체 국가직접사업의 사업 제거), ② 지원예산 중복 제거(중앙부처가 지원하는 지역특별회계 중 중앙부처 지원 금액 제거)를 위한 계정항목의 명확한 구분

<표 2-3> 광역지자체 소상공인 지원사업 산출방식

구분	내용
사업수 중복 제거	중앙부처가 직접지원 하는 국가직접지원사업 <sup>1)</sup> 의 경우 중앙부처의 내역사업 또는 내내역사업으로 포함하고 있어 사업수 산정 시 제거 단, 예산은 매칭형태로 지자체 자금을 세입세출예산서에 기재하고 있어, 예산은 적용
예산 중복 제거	지역특별 회계의 중앙부처의 지원금액을 포함한 전체금액으로 중앙부처 예산의 이중계상이 발생하여, 세입세출예산서상의 시도비만을 지역의 소상공인 예산으로 산정
간접운영비 성격의 예산 제외	사업설명자료 및 세입세출예산서 내의 업무추진비, 일반관리비, 자산취득비, 기관운영비, 인건비 등 사업운영을 위한 간접운영비 성격의 예산은 제외

## 제3장 소상공인 정책의 유형별 분류기준

### 1. 회계유형 및 지원형태별

- 회계유형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지특회계)2)', '기금'으로 구분3)
- (일반회계) 국가 고유의 일반 재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처리하는 회계로 조세수입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고 무상급부원칙으로 운용
- (특별회계) 특정사업 운영, 특정자금 운용,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이 필요할 때 사업수입, 목적세, 수수료, 부담금 등을 주된 재원으로 설치
- (기금)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별도로 조성하여 운영하기 위한 회계로서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15년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
  - 기금은 예산과 유사하나 예산의 주된 수입이 조세로서 강제 징수되고, 예산총계주의 원칙, 세입세출 혼동금지의 원칙,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등 합법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반면 기금은 이러한 원칙의 예외 적용을 광범위하게 인정받고 있고 재원도 스스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차이
  - 그밖에 수입과 지출의 집행과정도 예산은 법령에 의하여 배정·이용·전용·이체 등에 합법성의 통제를 받는데 비하여 기금은 합목적성 차원에서 재량과 탄력성을 크게 인정

1) 국가직접사업 : (경북)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 (경북)전통시장활력화사업 (광주)전통시장활성화사업 (광주)전통시장 TV홍보방송 지원사업 (대전)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울산)전통시장 육성사업 (전남)전남시장상인연합회 역량강화사업 (전남)전남우수전통시장 상품 전시판매전사업 (전남)전통시장 특화역거리 경진대회참가사업 (전북)전통시장 TV 홍보지원사업 (전북)전통시장 시장매너저 지원사업 (전북)소상공인 창업·경영개선사업 (전북)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경북)특성화시장육성사업 (대전)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인천)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인천)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2) 과거 2005년 국가균형발전법에 근거한 국가균형발전회계가 신설되었으며, 2010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운영되다 2015년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로 회계의 개편, 지역특별회계 운영지침,기재부

3) 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 및 제5조(기금의 설치)

<표 3-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의 차이

구 분	일반회계	특별회계(지특회계)	기금
설치 사유	·국가 고유의 일반 재정활동	·특정 사업 자금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 충당	·특정 목적에 특정 자금을 운용하고, 일정자금을 활용하여 특정사업을 안정하게 운영
재원조달과 운영형태	·공권력에 의한 조세수입과 무상급부원칙	·일반회계와 기금 운용 형태 혼재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으로 기금 고유사업 수행
확정 절차	·부처 예산요구 ·기획예산처가 정부 예산안 편성 ·국회 심의, 의결 확정	좌 동	·기금관리주체가 계획(안) 수립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조정, 국회 심의의결로 확정
집행 절차	·합법성에 입각하여 엄격히 통제하고,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좌 동	·항목적성 차원에서 재량과 탄력성 크게 인정
수입과 지출 연계	·특정 수입과 지출 연계 배제	·특정 수입과 지출의 연계	좌 동
계획 변경	·추경예산 편성	좌 동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20% 초과 변경 시 국회 심의의결 필요
결산	·국회 결산심의회 승인	좌 동	좌 동

○ 지원형태에 따라, ‘보조’, ‘출연’, ‘융자’ 사업으로 구분4)

- (보조)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교부하는 금전급부를 말하며 법적 성격은 무상증여에 해당
- (출연) 일반적으로 자기의 의사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는 등 자신은 재산상 손실을 입고 상대방은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기부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
  - 현행 법령에서는 행정주체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연구기관, 기금, 공단 등 출연 대상 주체에 대하여 특정 목적을 위해 지원하는 금전급부를 말함
- (융자) 민간이 행하는 사업 중 공익성이 크고 적극적으로 장려·진흥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정부가 재정자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민간금융기관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려줌으로써 사업자의 자금 확보를 도와주는 것을 말함

4) 정부입법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making.law.go.kr)

## 2. 기능별 분류

- (인력·교육) 교육훈련, 창업·경영컨설팅
- (금융) 보증지원, 융자지원, 이차보전, 자금지원5), 보험료·수수료6)
- (혁신·기술) 기술개발·사업화7), 디자인·브랜드8), 조직화·협업화, 정보화
- (마케팅) 박람회, 전시회, 축제, 홍보 프로그램, 공동구매 등 공동마케팅9)
- (인프라) 지원기관 구축·운영10), 상시활용 체제 및 공동시설 구축·운영11), 소상공인 정보 조사·연구·전파12)

<표 3-2> 예산 관련 소상공인 정책의 기능별 분류 기준

5대 기능 분류	세부 기능 분류
인력·교육	- 교육훈련 - 창업경영컨설팅
금 용	- 보증지원 - 융자지원 - 이차보전 - 자금지원 - 보험료·수수료
혁신·기술	- 기술개발·사업화 - 디자인·브랜드 - 조직화·협업화 - 정보화
마 케 팅	- 박람회, 전시회, 축제 등 - 홍보 프로그램 - 공동구매 등 공동마케팅
인 프 라	- 지원기관 구축·운영 - 상시활용 체제 및 공동시설 구축·운영 - 소상공인 정보 조사, 연구, 전파 등

- 5) 자금지원 : 금융지원 중에 보증 및 융자, 이차보전에 해당되지 않거나, 다양한 금융지원을 망라하여 혼합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을 이에 포함시킴(예 : 착한가격업소 지원, 온누리 상품권 판매 보조, 인센티브 제공, 우수숙박시설 지원육성, 골목상권 우대카드 포인트 적립 지원(정책) 등)
- 6) 보험료·수수료 등 : 음식점업 배상 책임보험료지원(1년),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료,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대행 수수료, 재래시장 상품권 유통수수료 지원 등이 이에 해당
- 7) 기술개발·사업화 : SW 전문 인력 역량 강화, 창조관광사업 발굴 및 육성, 공예품경진대회 개최, 공예 관광 기념품 품질 및 기술력 향상 지원 사업 등
- 8) 디자인·브랜드 :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전통시장 다시 살림 프로젝트 신시장 모델 육성,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모범음식점 관리, 나들가게 판매지원 사업 등
- 9) 공동구매 등 공동마케팅 :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 대체숙박업 활성화 지원사업,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사업,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사업 등
- 10) 지원기관 구축·운영 : 봉제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설치 운영, 소상공인 창업·경영 개선지원 사업 등
- 11) 상시활용 체제 및 공동시설 구축·운영 :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 조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전통시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 등
- 12) 소상공인 정보 조사·연구·전파 : 소상공인 성장 기반 조성, 상생협력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지원 사업 등

### 3. 생애주기별

- 소상공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주기를 네 가지로 구분
  - 생애주기는 창업(준비단계 포함), 창업 및 성장, 성장, 퇴로 및 안전망<sup>13)</sup>
    - 창업 및 성장은 창업단계와 성장단계 모두 지원하는 사업

### 4. 정책대상별 분류

- 소상공인을 총 9개로 구분하여 분류
  - 9개 분류 대상은 예비창업자, 소상공인(전체), 소공인, 슈퍼마켓·나들가게, 외식업, 숙박업, 전통시장, 프랜차이즈, 기타로 구성
    - 기타는 정책이 빈번하게 시행되지는 않지만 미용업과 같이 일부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한 경우

### 5. 정책속성별 분류<sup>14)</sup>

- 회계유형 및 지원형태, 기능, 생애주기, 정책대상 이외에 정책의 속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기준을 확장하여 소상공인 지원정책 분류
  - 추가적인 기준으로는 정부역할과 정책목표, 행정 성격 등으로 구분이 가능

#### (1) 정부의 역할분담 기준

-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한 역할분담을 기준으로 매칭분담·독자담당, 협력형·독자형·병렬형으로 구분
  - (매칭분담) 정부의 예산지원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에 분담하거나 정부(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와 정책수요자인 소상공인 간에 분담
  - (독자담당)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전액을 부담

13) 퇴로 및 안전망 사업: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전통시장 노후전기설비 개선 등이 이에 포함

14) 본 연구에서는 예산 관련 소상공인 정책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정책속성별 분류인 급부·규제·침해행정별 분류는 이론적인 논의만 서술하고 현황분석에서는 제외

- (협력형)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역할분담을 통해 추진
- (독자형)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각각 중복 또는 연계 없이 추진
- (병렬형)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동일한 기능으로 중복하여 추진

<표 3-3> 협력형·독자형·병렬형정책의 개념과 차이

정책유형	내용
협력형	(공동협력형) 동일한 사업에 대해 공동으로 예산분담 또는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연계협력형)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자 하는 사업에서 정책대상·기능·생애주기를 중에 1개라도 다르거나 또는 같더라도 정책공급 과정에서 상호대체가 아닌 상호 보완 역할을 하는 경우
독자형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사업이 정책대상·기능·생애주기를 중에서 1개라도 다르고 모두가 같더라도 정책내용이 상이한 경우
병렬형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사업이 정책대상·기능·생애주기가 동일하고, 추구하는 목표 등 세부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혼합형	중앙정부 특정사업이 여러 지자체 사업과 연계협력·독자·병렬형 등 다양한 관계를 이루는 경우에 혼합형으로 별도 분류

- 매칭분담·독자담당정책과 협력형·독자형·병렬형정책간 관계는 <표 3-4>와 같음
  - 한 개 사업 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매칭분담정책은 협력형정책이 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독자담당 형태로 수행하는 정책이 두 개 사업 간에 연계성을 갖게 되면 협력형
    - 매칭분담 방식의 협력형정책은 공동협력형 정책, 독자담당 방식의 협력형정책은 연계협력형 정책으로 구분
  -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독자담당 형태로 수행하는 정책이 2사업 간에 중복성이 없거나 연계성이 없으면 독자형정책이 되고 중복된다면 병렬형
-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서 지자체간에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경우에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역할 분담 시 중앙정부 정책은 혼합형
  - 즉, 중앙정부와 역할분담에 있어서 개별 지자체간에도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어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특정사업과 관련하여 어떤 지자체의 특정사업과는 연계협력형의 관계에 또 다른 지자체의 특정사업과는 병렬형의 관계가 존재

- 이러한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정책유형이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변화되는 것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혼합형으로 분류

<표 3-4> 매칭분담·독자담당정책과 협력형·독자형·병렬형정책간 관계

정책유형	역할분담 여부	정책유형
매칭분담	한 개 사업내 공동	(공동)협력형
독자담당	두 개 사업간 연계	(연계)협력형→혼합형
	두 개 사업간 비중복비연계	독자형→혼합형
	두 개 사업간 중복	병렬형→혼합형

- 따라서 정책의 역할분담 기준은 정책의 유사·중복과 같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정책의 전달체계의 구조를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공동협력형·연계협력형·독자형·병렬형 등의 구분을 위한 기본절차는 <그림 3-1>과 같음

- 즉, 중앙부처와 지자체간의 정책의 연계성 그리고 정책의 연계성이 협력적이나 아니면 유사·중복이나 등과 같은 논의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 도출에 활용 가능

- 정책의 역할분담 현황을 분류하기 위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단계 정도로 구분이 가능

- 우선 동일 사업 내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적으로 역할을 매칭분담하는 경우에는 공동협력형 정책에 해당하므로 중복 평가에 앞서 평가대상에서 제외 하고 1단계에서 정책대상이 동일하지 않은 정책은 독자형 정책으로 분류

- 2단계에서 정책대상이 동일한 정책내에서 기능별 유형이 같은지를 비교분석하여 중복 여부를 판단

- 정책대상이 동일하더라도 기능별 유형이 다르면 중복 정책이 아니며, 연계형 정책 또는 독자형 정책에 포함

- 3단계에서 동일 정책대상에게 동일 기능으로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생애주기가 같은지로 중복 여부를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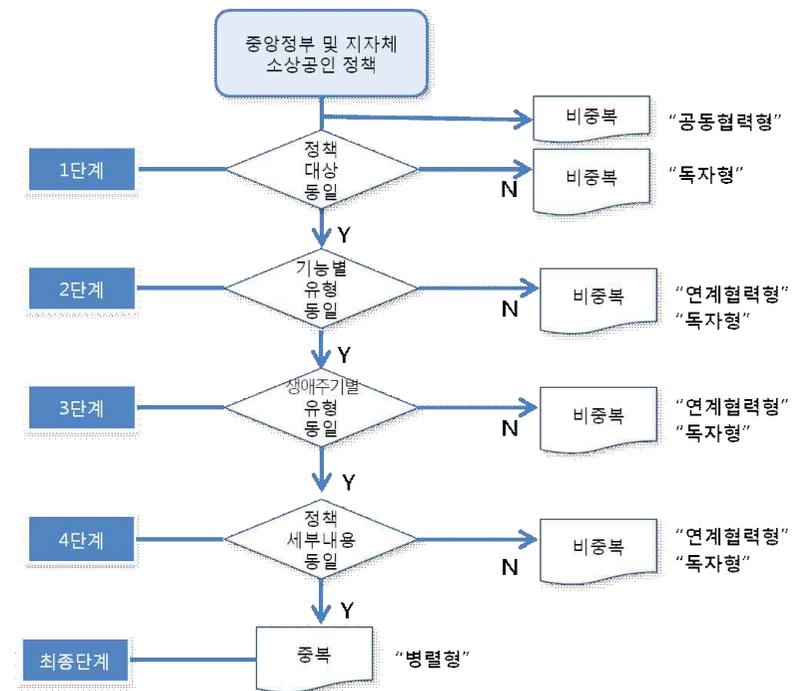
- 생애주기가 다른 경우에는 중복이 없는 정책으로 연계형 정책 또는 독자형 정책에 포함

- 1-3단계 후에 4단계에서 정책 세부내용이 유사·중복되면 병렬형으로 분류

- 중앙부처에서의 정책유형 중 혼합형은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와의 정책유형 분류과정에서 동일한 중앙부처의 사업이지만 지자체간에 서로 다른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정책유형이 변화되는 경우의 정책유형<sup>15)</sup>

- 중앙부처의 혼합형 사업 중 병렬형을 포함한 경우는 중복 사업으로 분류

<그림 3-1> 정책의 유사·중복성 평가 기본절차<sup>16)</sup>



15) 일례로 A라는 지자체에서 '상인교육 및 시장관리'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에 중앙부처의 정책유형은 독자형으로 분류되나, B라는 지자체에서 유사·중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 중앙부처의 정책유형은 병렬형으로 분류되는 경우에 '상인교육 및 시장관리' 사업은 혼합형 정책유형으로 구분

16) <그림 3-1>은 기본절차로서 정책대상별 및 생애주기가 동일하더라도 기능별이 다른 경우에도 연계협력형 또는 독자형으로 분류

(2) 정책목표 기준

- 소상공인 보호, 육성, 적응, 불리시정 등으로 정부의 정책목표 구분 가능
  - (보호) 소상공인을 도태과정에서 보호
  - (육성) 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새로운 방식으로 부가가치를 만드는 혁신 소상공인 양성, 배출 등
  - (적응) 급변하는 시장경제에서 소상공인이 적응할 수 있도록 경쟁력 향상을 추진
  - (불리시정) 시장질서의 유지를 위해 대기업과 평등한 경쟁조건을 창출하고자 적극적인 경쟁력 강화정책인 적응과 달리 소극적인 경쟁조건 정비<sup>17)</sup>
- 보호·적응·불리시정 정책유형을 중소기업 관련법과 관련하여 구분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당위성과 철학연구 최세경·오동윤·한국중소기업학회(2014)에 준거하여 소상공인 정책은 다음 장의 <표 3-5>와 같이 분류
  - 소상공인 육성정책은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을 전제로 하고 있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적응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응정책에 포함하여 분류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당위성과 철학연구, 최세경·오동윤·한국중소기업학회, 2014, p. 62)

17) 불리시정 정책의 방법으로는 대기업이 행하는 경쟁제한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방법과 대기업에 대하여 소상공인의 대항력을 형성하는 방법이 있음. 따라서 소상공인의 대항력을 형성하는 것은 극단적인 경우에는 보호정책과 같게 되고, 불리시정이 대기업의 경쟁제한적 행위의 금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경우에는 적응정책이 됨(이윤보, 2014 참고)

<표 3-5> 정책목표에 근거한 소상공인 지원정책 유형

유형	정책목표	정책수단
보호 정책	사업영역 보호	사업조정, 적합업종
	건전한 유통질서	대규모 점포 및 SSM 영업규제, 입점거리 제한
	소상공인 기술보호	기술보호 지원 및 성과물 보호
적응 정책	소상공인 구조 고도화	자동화
		정보화, 신사업 발굴
		물류현대화
		협동화(공동사업 및 협업)
		가업승계
		사업전환 촉진, 소상공인 공제
		혁신형 소상공인 창업촉진, 해외창업
	소상공인 성장기반 조성	창업촉진 및 재창업 지원
		전통시장 현대화, 시장정비 촉진, 상권활성화 등
		1인 창조기업 창업 및 성장기반 조성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기술혁신 촉진 및 기술경쟁력 강화	
	인력수급 원활화 및 고도화, 인식개선 등	
	기금조성 및 신용보증 등 자금공급	
	소상공인 국내외 판로지원, 전용매장 설치 등	
불리시정 정책	소상공인 경제적 기회균등	거래공정화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공공구매 등
		여성 소상공인 지원 및 차별관행 시정, 공공구매 등
		장애 소상공인 창업지원, 자금지원 우대, 공공구매 등

(3) 정책의 행정 성격 기준<sup>18)</sup>

- 소상공인 정책의 유형을 최세경·오동윤·한국중소기업학회(2014)에서 거론된 소상공인 정책의 행정적 성격에 따라 급부행정·규제행정·침해행정 정책으로 분류
  - 행정 성격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 인해 소상공인을 제외한 다른 구성원에게 주는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

18) 행정적 성격에 관한 논의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당위성과 철학연구 최세경·오동윤·한국중소기업학회(2014), pp. 63-66를 참고

- 행정 성격을 기준으로 한 정책유형은 정책학 : 이론과 경험적 연구 중 남궁근 (2008)이 언급하고 있는 규제정책과 배분정책의 맥락과 동일
- 규제정책은 개인이나 기업 등 일부 집단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대신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규제행정과 침해행정으로 구분
- 배분정책은 정부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공공서비스를 적극 제공하는 것으로 급부행정에 해당<sup>19)</sup>
- 급부행정은 사회구성원 또는 정책대상을 배려하고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유형
- 급부행정으로서의 소상공인 정책은 정책대상인 소상공인을 경제의 한 주체이며 사회구성원으로 인식하고 공동체 유지와 형성측면에서 배려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 또는 자유 시장질서가 발생시키는 폐단으로부터 소상공인이 겪는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정책
- 급부행정은 사회보장행정, 공공서비스와 재화를 공급하는 공급행정, 자금을 보조하는 조성행정으로 세분화 가능
- 대부분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 또는 사회보장에서 급부행정이 존재하므로 급부행정에는 시장실패가 예견되는 소상공인의 자금·정보·인력 등에 대한 지원정책이 해당
- 사회보장 측면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지원, 고용보험 관련 보조금 지급 등이 해당
- 규제행정은 전체 사회질서의 조정과 이익을 위해 사회구성원 또는 정책대상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유형
- 규제행정으로서의 소상공인 정책은 정책대상인 소상공인의 행위 또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하거나 소상공인에게 일정한 부담을 가하는 정책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인허가·등록·신고와 같은 시장진입 규제
- 소상공인간 또는 소상공인과 여타 규모의 기업간 거래행위를 제한하는 규제
- 소상공인과 소비자간 거래에 영향을 미치거나 소비자 권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상공인 활동과 행위를 규제하는 가격 또는 품질규제

19) 조성행정이라고도 지칭됨.

-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행정활동을 목적으로 자료제출 또는 신고 등에 대한 의무를 소상공인에게 요구하는 행정규제
- 침해행정은 정책대상을 위해 다른 사회적 구성원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유형
- 침해행정으로서의 소상공인 정책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중견기업의 행위 또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침해하는 정책
-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적합업종제도와 사업조정제도
-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보호를 위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규제 및 입점규제
- 중소기업의 시장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대기업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지원행위인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표 3-6> 행정적 성격에 근거한 소상공인 지원정책 유형

유형	세부 내용	정책수단
급부행정	사회보장행정	세제지원, 고용보험 관련 보조금 지급 등
	공급행정	정보, 인력 등에 대한 지원
	조성행정	자금융자 또는 보조
규제행정	시장진입규제	인허가, 등록, 신고 등
	거래규제	소상공인간, 소상공인과 대기업·중견기업간 거래 관련
	가격 또는 품질규제	소비자 권익 관련 소상공인 활동과 행위를 규제
	행정규제	행정활동을 위한 자료제출 또는 신고 등에 대한 의무
침해행정	사업영역보호	적합업종제도, 사업조정제도
	중소상인보호	대규모점포·SSM에 대한 영업규제, 입점규제
	중소상공인 시장참여기회 확대	일감몰아주기 규제

## 제4장 소상공인 지원정책 유형별 현황

### 1. 개요

#### (1) 종합

-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17년 예산은 23,463억원으로 '16년 22,732억원에 견주어 731억원 3.2% 증가
- 사업건수는 '17년 359개 사업을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에서 운영<sup>20)</sup>

<표 4-1> 예산규모로 본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소상공인 정책 역할분담

(단위 : 억원, 건수)

구분	연도	중앙부처	지자체	총계
금액(비중)	2014	88.6% (14,187)	11.4% (1,824)	100.0% (16,011)
	2015	89.5% (20,291)	10.5% (2,383)	100.0% (22,674)
	2016	91.1% (20,700)	8.9% (2,032)	100.0% (22,732)
	2017	91.6% (21,498)	8.4% (1,965)	100.0% (23,463)
건수	2014	13.8% (43)	86.2% (268)	100.0% (311)
	2015	18.1% (63)	81.9% (285)	100.0% (348)
	2016	18.7% (70)	81.3% (305)	100.0% (375)
	2017*	15.9% (57)	84.1% (302)	100.0% (359)

\* '16년 예산관련 사업건수는 내역사업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운용과 관련하여 내역사업 중 중앙정부의 금융지원·정보인프라·네트워크 등의 부분은 내내역 사업단위를 적용에 따른 사업단위가 맞지 않아 '17년 기준 사업수(내역사업기준) 감소(부록참조-2)

\*\* (15년) 내역사업수 : 전체-348(중앙부처 : 57, 지자체 285)

\*\*\* (16년) 내역사업수 : 전체-356(중앙부처 : 51, 지자체 305)

#### (2) 중앙부처

- '17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은 '16년 20,700억원에서 798억원이 늘어난 21,498억원이고 사업수는 '16년 70개(내내역사업포함)에서 7개 줄어든 57개
- '17년 사업수는 중소기업부가 46개이며, 3개 부처(고용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관광부)가 11개
  - 고용노동부(4개) : 자영업자직업능력개발지원, 산재근로자창업점포지원(융자), 자영업자 구직급여, 자영업자 실업급여
  - 미래창조과학부(2개) : SW전문인력역량강화, 온라인광고 유통기반조성
  - 문화관광부(5개) : 관광기업 발굴 및 지원, 강원전통음식 관광상품화, 중저가 우수숙박시설 확충, 안전한 민박활성화, 음식관광 활성화

<표 4-2> 중앙부처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 및 사업수 현황

(단위 : 억원, 건수)

구분	2014		2015		2016		2017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중소기업청	99.1% (14,057)	88.4% (38)	99.5% (20,198)	92.1% (58)	99.7% (20,637)	92.9% (65)	99.3% (21,340)	80.7% (46)
고용노동부	0.3% (43)	4.7% (2)	0.1% (29)	3.2% (2)	0.0% (6)	2.9% (2)	0.4% (79)	7.0% (4)
미래창조과학부	0.0% (5)	2.3% (1)	0.0% (5)	1.6% (1)	0.0% (5)	1.4% (1)	0.0% (7)	3.5% (2)
문화관광부	0.2% (25)	2.3% (1)	0.1% (24)	1.6% (1)	0.1% (18)	1.4% (1)	0.3% (72)	8.8% (5)
여성가족부	0.4% (57)	2.3% (1)	0.2% (35)	1.6% (1)	0.2% (34)	1.4% (1)	0.0% (0)	0.0% (0)
소계	100.0% (14,187)	100.0% (43)	100.0% (20,291)	100.0% (63)	100.0% (20,700)	100.0% (70)	100.0% (21,498)	100.0% (57)

주: ( )는 소계 대비 비중

20) 광역지자체(17개)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3) 지자체

- 17개 광역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은 '16년 2,032억원에서 '17년에는 1,965억원으로 줄었고 사업수도 '16년 305개에서 '17년 302개로 감소
- 예산과 사업수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크고, 서울의 예산이 538억으로 가장 많은 비중(27.4%)을 차지하고 사업수도 '17년 30개로 가장 많은 수준

<표 4-3> 지자체의 소상공인 사업 관련 예산 및 사업 수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예 산	사업 수						
강원	2.9% (53)	7.8% (21)	4.8% (114)	8.1% (23)	3.7% (75)	7.9% (24)	5.2% (103)	9.9% (30)
경기	1.4% (26)	5.2% (14)	3.8% (91)	6.3% (18)	4.1% (83)	8.2% (25)	12.1% (237)	6.3% (19)
경남	3.4% (62)	8.2% (22)	4.7% (112)	7.7% (22)	5.2% (106)	5.2% (16)	3.8% (75)	6.0% (18)
경북	12.0% (219)	5.6% (15)	7.7% (183)	5.3% (15)	5.3% (177)	8.7% (16)	5.4% (107)	4.3% (13)
광주	3.0% (54)	8.2% (22)	6.3% (149)	9.8% (28)	2.9% (59)	5.6% (17)	2.5% (49)	5.3% (16)
대구	2.0% (36)	3.0% (8)	4.9% (117)	3.9% (11)	5.0% (102)	6.2% (19)	3.4% (67)	6.6% (20)
대전	1.2% (21)	2.6% (7)	1.1% (26)	4.2% (12)	2.2% (45)	5.9% (18)	2.3% (45)	4.0% (12)
부산	17.7% (323)	5.2% (14)	16.4% (390)	4.9% (14)	17.8% (361)	5.9% (18)	15.2% (299)	6.3% (19)
서울	28.3% (517)	11.2% (30)	23.8% (568)	10.9% (31)	30.2% (614)	9.8% (30)	27.4% (538)	9.9% (30)
세종	0.6% (11)	2.2% (6)	0.8% (20)	2.8% (8)	0.6% (11)	2.3% (7)	0.3% (6)	2.0% (6)
울산	1.8% (33)	1.5% (4)	2.0% (47)	1.8% (5)	0.7% (14)	2.3% (7)	0.8% (15)	3.3% (10)
인천	3.0% (55)	3.4% (9)	4.4% (105)	3.2% (9)	2.3% (48)	2.6% (8)	4.3% (84)	4.0% (12)
전남	3.0% (54)	1.5% (4)	6.8% (163)	3.9% (11)	6.0% (123)	6.9% (21)	6.6% (129)	7.6% (23)
전북	2.9% (53)	9.0% (24)	1.8% (43)	8.4% (24)	3.1% (64)	5.2% (16)	3.4% (68)	4.6% (14)
제주	1.7% (31)	10.4% (28)	1.3% (31)	8.1% (23)	2.3% (47)	8.2% (25)	2.6% (51)	8.9% (27)
충남	4.7% (87)	4.1% (11)	4.8% (114)	3.5% (10)	2.5% (51)	3.6% (11)	2.7% (53)	4.0% (12)
충북	10.5% (191)	10.8% (29)	4.7% (112)	7.4% (21)	2.6% (53)	8.9% (27)	2.0% (39)	7.0% (21)
소계	100.0% (1,824)	100.0% (268)	100.0% (2,383)	100.0% (285)	100.0% (2,032)	100.0% (305)	100.0% (1,965)	100.0% (302)

주: ( )는 소계 대비 비중

2. 유형분류별 현황<sup>2)</sup>

(1) 회계유형 및 지원형태별

- 금액기준으로 본 회계유형으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통합한 전체 사업에서 기금이 가장 많은 비중 차지
- 중앙부처의 경우 가장 많은 비중이 기금이며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반면 지특회계는 지속적으로 감소
- 지자체의 경우는 가장 많은 비중이 일반회계이며 일반회계 규모는 '15년에 가장 크고 '16년 이후 줄어든 반면 기금 규모는 '16년에 전년 대비 증가한 후 '17년 감소
- '17년 현재 중앙부처 예산 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금의 비중은 96.4%, 지자체 예산규모 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회계 비중은 81.3%
- (일반회계) '17년 중앙부처 4억원, 지자체 1,597억원 → 전체사업의 6.8%(1,601억원)
- (지특회계) '17년 중앙부처 775억원, 지자체 0원 → 전체사업의 3.3%(775억원)
- (기금) '17년 중앙부처 20,719억원, 지자체 368억원 → 전체사업의 87.6%(20,547억원)

<표 4-4> 회계유형별 예산 분포(금액기준)

(단위: 억원)

2014		2015		2016		2017	
중앙부처 (14,187)	지자체 (1,824)	중앙부처 (20,291)	지자체 (2,383)	중앙부처 (20,700)	지자체 (2,032)	중앙부처 (21,498)	지자체 (1,965)
① 일반회계	① 일반회계						
0.0% (5)	81.6% (1,490)	0.0% (5)	89.2% (2,126)	0.0% (5)	80.7% (1,639)	0.0% (4)	81.3% (1,597)
② 광특회계	② 광특회계	② 지특회계	② 지특회계	② 지특회계	② 지특회계	② 지특회계	② 지특회계
10.0% (1,423)	- (-)	4.1% (822)	- (-)	3.9% (816)	- (-)	3.6% (775)	- (-)
③ 기 금	③ 기 금	③ 기 금	③ 기 금	③ 기 금	③ 기 금	③ 기 금	③ 기 금
89.9% (12,759)	18.4% (335)	95.9% (19,464)	10.8% (257)	96.0% (19,879)	19.3% (393)	96.4% (20,719)	18.7% (368)

주: ( )는 금액

2) 2가지 유형으로 분석된 복합적인 유형분류별 현황에 대해서는 <부록 1>에 수록

- 건수 기준으로 본 회계유형으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통합한 전체 사업에서 일반회계 사업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중앙부처는 기금사업이 가장 많고, 건수는 '14년 40개, '16년 67개, 17년 52개
  - 지자체는 '17년 일반회계사업이 256개로 가장 많고, 기금사업은 오히려 감소
- '17년 현재 중앙부처 사업수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금의 비중은 91.2%, 지자체 사업수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회계 비중은 84.8%
  - (일반회계) '17년 중앙부처 1개, 지자체 256개 → 전체사업의 71.6%(257개)
  - (지특회계) '17년 중앙부처 4개 → 전체사업의 1.1%(4개)
  - (기금) '17년 중앙부처 52개, 지자체 46개 → 전체사업의 27.3%(98개)

<표4-5> 회계유형별 예산 분포(건수기준)

(단위: 개)

2014		2015		2016		2017	
중앙부처 (43)	지자체 (268)	중앙부처 (63)	지자체 (285)	중앙부처 (70)	지자체 (305)	중앙부처 (55)	지자체 (302)
① 일반회계	① 일반회계						
2.3% (1)	89.6% (240)	1.6% (1)	89.8% (256)	1.4% (1)	80.9% (247)	1.8% (1)	84.8% (256)
② 광특회계	② 광특회계	② 지특회계	② 지특회계	② 지특회계	② 지특회계	② 지특회계	② 지특회계
4.7% (2)	- (-)	3.2% (2)	- (-)	2.9% (2)	- (-)	7.0% (4)	- (-)
③ 기금	③ 기금						
93.0% (40)	10.4% (28)	95.2% (60)	10.2% (29)	95.7% (67)	19.1% (58)	91.2% (52)	15.2% (46)

주: ( )는 건수

-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사업예산에서 용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중앙부처의 경우 가장 많은 비중이 용자이며, 용자와 보조는 '14년 이후 계속 늘어난 반면 출연은 '15년에 정점을 보인 후에 '17년에도 감소
  - 지자체의 경우 가장 많은 비중이 보조이며, 보조와 출연은 '15년에 정점을 보인 후에 '16년에 감소한 반면 용자는 '16년에 전년 대비 감소한 후에 '17년 증가

- '17년 중앙부처 예산에서 용자의 비중은 75.1%로 가장 많은 차지하고, 지자체는 보조가 68.9%로 가장 많은 비중 차지
  - (출연) '17년 중앙부처 392억원, 지자체 202억원 → 전체사업의 2.5%(594억원)
  - (용자) '17년 중앙부처 16,271억원, 지자체 410억원 → 전체사업의 71.1%(16,681억원)
  - (보조) '17년 중앙부처 4,835억원, 지자체 1,353억원 → 전체사업의 26.4%(6,188억원)

<표 4-6> 지원형태별 예산 분포(금액기준)

(단위: 억원)

2014		2015		2016		2017	
중앙부처 (14,187)	지자체 (1,824)	중앙부처 (20,291)	지자체 (2,383)	중앙부처 (20,700)	지자체 (2,032)	중앙부처 (21,498)	지자체 (1,965)
① 출연	① 출연	① 출연	① 출연	① 출연	① 출연	① 출연	① 출연
3.9% (548)	30.8% (561)	4.2% (860)	24.4% (582)	2.4% (500)	25.2% (513)	1.8% (392)	10.3% (202)
② 용자	② 용자	② 용자	② 용자	② 용자	② 용자	② 용자	② 용자
72.9% (10,341)	19.7% (360)	73.9% (14,994)	11.8% (281)	75.1% (15,552)	21.0% (427)	75.7% (16,271)	20.9% (410)
③ 보조	③ 보조	③ 보조	③ 보조	③ 보조	③ 보조	③ 보조	③ 보조
23.2% (3,297)	49.5% (903)	21.9% (4,437)	63.8% (1,520)	22.5% (4,648)	53.7% (1,092)	22.5% (4,835)	68.9% (1,353)

주: ( )는 금액

- 건수기준의 지원형태로 보면,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통합한 전체 사업에서 보조 사업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중앙부처는 가장 많은 비중이 보조이며 ('14년) 34개 → ('15년) 53개 → ('16년) 59개 → ('17년) 51개
  - 지자체는 가장 많은 비중이 보조이며 ('14년) 225개 → ('15년) 242개 → ('16년) 259개 → ('17년) 265개로 계속 증가
- '17년 중앙부처 사업수에서 보조의 비중은 89.5% 가장 많은 차지하고 지자체 사업수에서 보조 비중은 87.7%로 가장 많은 비중 차지

- (출연) '17년 중앙부처 3개, 지자체 14개 → 전체사업의 4.7%(17개)
- (용자) '17년 중앙부처 3개, 지자체 23개 → 전체사업의 7.2%(26개)
- (보조) '17년 중앙부처 51개, 지자체 265개 → 전체사업의 88.0%(316개)

<표 4-7> 지원형태별 예산 분포(건수기준)

(단위: 개)

2014		2015		2016		2017	
중앙부처 (43)	지자체 (268)	중앙부처 (63)	지자체 (285)	중앙부처 (70)	지자체 (305)	중앙부처 (57)	지자체 (302)
① 출연	① 출연						
2.3% (1)	11.2% (30)	3.2% (2)	10.5% (30)	2.9% (2)	6.6% (20)	5.3% (3)	4.6% (14)
② 용자	② 용자						
18.6% (8)	4.9% (13)	12.7% (8)	4.6% (13)	12.9% (9)	8.5% (26)	5.3% (3)	7.6% (23)
③ 보조	③ 보조						
79.1% (34)	84.0% (225)	84.1% (53)	84.9% (242)	84.3% (59)	84.9% (259)	89.5% (51)	87.7% (265)

주: ( )는 건수

(2) 기능별

- 금액기준으로 기능별 전체 사업을 살펴보면, 금융 예산이 가장 많은 비중이며, 인프라, 혁신·기술, 인력·교육, 마케팅 순으로 많은 비중
- 금융과 인력·교육 기능 예산이 '14~'17년까지 계속 늘어난 반면 마케팅 예산은 '16년 감소하였으나 '17년에 다시 증가
- 인프라 관련 예산은 '17년에 전년 대비 감소
- 중앙부처는 금융 예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프라, 혁신·기술, 인력·교육, 마케팅 기능 순으로 많은 비중
- 금융 예산은 '14년~'17년 계속 늘어났고 인프라 예산은 '14년~'16년까지 증가하다가 '17년은 다소 감소

- 혁신·기술 예산은 '15년 정점에서 '16년에 소폭 감소하였으며 '17년에 소폭 증가
- 인력·교육 예산은 '14년~'17년까지 계속 증가한 반면 마케팅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17년 소폭 증가

○ 지자체는 '14년에 금융 예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금융과 마케팅 예산은 '15년에 전년 대비 감소 후 '16년에 증가하였으나, '17년 소폭 감소하였고 인력·교육예산은 '15년에 전년대비 증가 후 '16년 감소이후 '17년 증가
- 반면 혁신·기술 기능의 예산규모는 '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표 4-8> 기능별 예산 분포(금액기준)

(단위: 억원)

구 분	인력 교육	금융	혁신 기술	마케팅	인프라	총계	
중앙 부처	2014	2.7% (380)	79.5% (11,281)	4.3% (609)	2.7% (376)	10.9% (1,540)	100.0% (14,187)
	2015	3.6% (732)	80.0% (16,238)	5.5% (1,118)	1.1% (222)	9.8% (1,980)	100.0% (20,291)
	2016	3.7% (768)	80.0% (16,563)	5.1% (1,049)	0.9% (180)	10.3% (2,139)	100.0% (20,700)
	2017	4.0% (857)	80.7% (17,342)	5.0% (1,072)	1.0% (223)	9.3% (2,004)	100.0% (21,498)
지자체	2014	3.3% (59)	57.6% (1,050)	2.9% (54)	4.8% (88)	31.4% (573)	100.0% (1,824)
	2015	3.3% (78)	39.9% (951)	2.7% (65)	3.1% (75)	51.0% (1,215)	100.0% (2,383)
	2016	3.3% (67)	47.6% (967)	4.9% (100)	4.5% (91)	39.7% (807)	100.0% (2,032)
	2017	5.1% (101)	36.4% (715)	8.0% (157)	8.6% (169)	41.9% (824)	100.0% (1,965)
전체	2014	2.7% (439)	77.0% (12,331)	4.1% (663)	2.9% (464)	13.2% (2,113)	100.0% (16,011)
	2015	3.6% (810)	75.8% (17,189)	5.2% (1,182)	1.3% (297)	14.1% (3,195)	100.0% (22,674)
	2016	3.7% (836)	77.1% (17,530)	5.1% (1,149)	1.2% (271)	13.0% (2,946)	100.0% (22,732)
	2017	4.1% (958)	77.0% (18,057)	5.2% (1,229)	1.7% (392)	12.1% (2,828)	100.0% (23,464)

주: ( )는 금액

- 건수기준으로 기능별 사업을 살펴보면,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사업에서 마케팅 사업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혁신·기술 사업수가 가장 적은 비중 차지
- 중앙부처 사업 중 혁신·기술 사업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마케팅 사업수가 가장 적은 비중 차지
- 지자체 사업 중 마케팅의 사업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인력·교육 및 인프라는 계속 증가 추세이며, 금융은 '16년과 전주어 감소

<표 4-9> 기능별 예산 분포(건수기준)

(단위: 개)

구분	인력 교육	금융	혁신 기술	마케팅	인프라	총계	
중앙 부처	2014	18.6% (8)	27.9% (12)	25.6% (11)	9.3% (4)	18.6% (8)	100.0% (43)
	2015	19.0% (12)	22.2% (14)	30.2% (19)	7.9% (5)	20.6% (13)	100.0% (63)
	2016	21.4% (15)	21.4% (15)	25.7% (18)	5.7% (4)	25.7% (18)	100.0% (70)
	2017	24.6% (14)	15.8% (9)	29.8% (17)	7.0% (4)	22.8% (13)	100.0% (57)
지자체	2014	15.7% (42)	22.8% (61)	11.6% (31)	29.1% (78)	20.6% (56)	100.0% (268)
	2015	16.5% (47)	21.4% (61)	11.6% (33)	28.1% (80)	22.5% (64)	100.0% (285)
	2016	15.4% (47)	21.6% (66)	13.4% (41)	28.9% (88)	20.7% (63)	100.0% (305)
	2017	16.2% (49)	20.5% (62)	9.6% (29)	29.1% (88)	24.5% (74)	100.0% (302)
전체	2014	16.1% (50)	23.5% (73)	13.5% (42)	26.4% (82)	20.6% (64)	100.0% (311)
	2015	17.0% (59)	21.6% (75)	14.9% (52)	24.4% (85)	22.1% (77)	100.0% (348)
	2016	16.5% (62)	21.6% (81)	15.7% (59)	24.5% (92)	21.6% (81)	100.0% (375)
	2017	17.5% (63)	19.8% (71)	12.8% (46)	25.6% (92)	24.2% (87)	100.0% (359)

주: ( )는 건수

(3) 생애주기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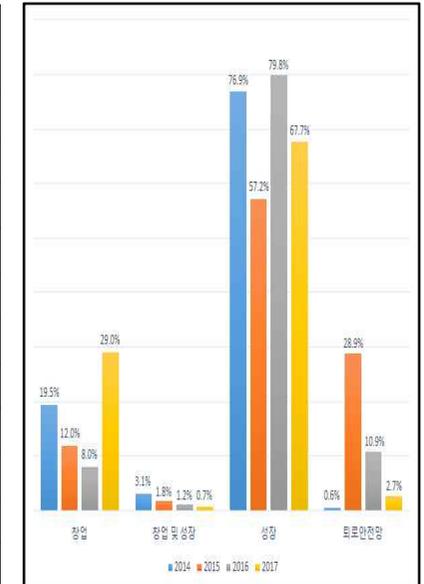
- (금액기준) 성장단계 사업예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창업단계는 '17년에 증가, 성장단계는 '16년까지 증가하다 '17년 감소
  - 퇴로 및 안전망 단계 예산은 '15년에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으나, 이후 상당히 감소
- 중앙부처는 성장단계 예산규모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창업단계는 '17년에 증가, 성장단계는 '16년까지 많이 증가하다 '17년 감소
  - 퇴로 및 안전망 단계는 '15년 높은 증가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
- 지자체도 중앙부처와 마찬가지로 성장단계 예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창업단계는 증가 추세, 성장단계는 등락 반복, 퇴로 및 안전망 단계는 증가 추세

<표 4-10> 생애주기별 예산 분포(금액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창업	창업 및 성장	성장	퇴로 및 안전망	
중앙 부처	'14	21.9% (3,101)	0.2% (25)	77.4% (10,987)	0.5% (73)
	'15	13.3% (2,705)	0.1% (24)	54.3% (11,024)	32.2% (6,538)
	'16	8.7% (1,802)	0.1% (18)	79.6% (16,487)	11.6% (2,393)
	'17	31.5% (6,770)	0.3% (72)	65.9% (14,161)	2.3% (494)
지 자 체	'14	1.0% (18)	25.6% (467)	72.2% (1,317)	1.2% (23)
	'15	0.8% (19)	16.2% (387)	82.1% (1,956)	0.9% (22)
	'16	1.3% (27)	12.7% (259)	81.8% (1,662)	4.1% (84)
	'17	1.4% (28)	4.7% (92)	87.2% (1,715)	6.7% (131)
전 체	'14	19.5% (3,119)	3.1% (492)	76.9% (12,305)	0.6% (96)
	'15	12.0% (2,724)	1.8% (411)	57.2% (12,980)	28.9% (6,560)
	'16	8.0% (1,829)	1.2% (277)	79.8% (18,149)	10.9% (2,477)
	'17	29.0% (6,798)	0.7% (164)	67.7% (15,876)	2.7% (625)

주: ( )는 금액



○ 건수기준으로 본 생애주기별 사업은 예산규모로 본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장단계 사업수 비중이 가장 많이 차지

- '17년 기준으로 성장, 퇴로 및 안전망이 전체 92.2%를 차지

○ 중앙부처는 성장단계 사업수가 가장 많은 비중

- '14~'16년간 창업 및 성장단계 사업수는 1개로 유지되었지만 '17년 5개로 증가

○ 지자체의 성장단계 사업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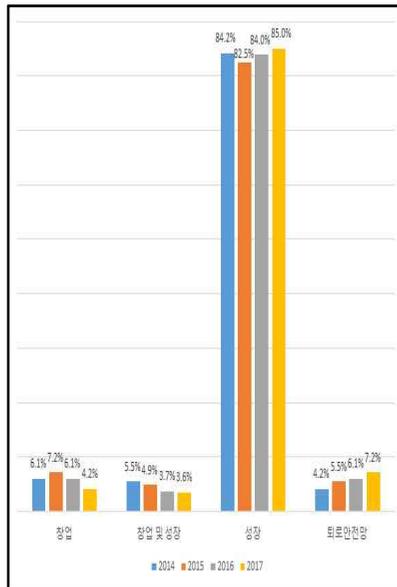
- 창업단계, 창업 및 성장단계 사업수는 '15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 반면 퇴로 및 안전망 사업은 '14년부터 지속적인 증가 추세

<표 4-11> 생애주기별 예산 분포(건수기준)

구분	창업	창업 및 성장	성장	퇴로 및 안전망	
중앙부처	'14	20.9% (9)	2.3% (1)	60.5% (26)	16.3% (7)
	'15	19.0% (12)	1.6% (1)	61.9% (39)	17.5% (11)
	'16	22.9% (16)	1.4% (1)	60.0% (42)	15.7% (11)
	'17	15.8% (9)	8.8% (5)	57.9% (33)	17.5% (10)
지자체	'14	3.7% (10)	6.0% (16)	88.1% (236)	2.2% (6)
	'15	4.6% (13)	5.6% (16)	87.0% (248)	2.8% (8)
	'16	2.3% (7)	4.3% (13)	89.5% (273)	3.9% (12)
	'17	2.0% (6)	2.6% (8)	90.1% (272)	5.3% (16)
전체	'14	6.1% (19)	5.5% (17)	84.2% (262)	4.2% (13)
	'15	7.2% (25)	4.9% (17)	82.5% (287)	5.5% (19)
	'16	6.1% (23)	3.7% (14)	84.0% (315)	6.1% (23)
	'17	4.2% (15)	3.6% (13)	85.0% (305)	7.2% (26)

(단위 : 개)



○ '14-'17년 생애주기별에 대해 기능별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금액기준으로 성장단계의 금융기능, 사업수 기준으로는 성장단계의 마케팅 기능이 가장 많은 비중 차지

(2014년)

<표 4-12> 생애주기 및 기능별 분류에 따른 전체 예산 및 사업 수 분포 현황

(단위 : 개)

생애주기/기능	창업	창업 및 성장	성장	퇴로 및 안전망	전체
인력.교육	0.6% (9)	0.3% (4)	1.9% (37)	0.0% (0)	2.7% (50)
금융	18.4% (4)	2.6% (10)	55.7% (53)	0.3% (6)	77.0% (73)
혁신.기술	0.0% (1)	0.2% (1)	4.0% (40)	0.0% (0)	4.1% (42)
마케팅	0.0% (1)	0.0% (0)	2.9% (81)	0.0% (0)	2.9% (82)
인프라	0.5% (4)	0.0% (2)	12.3% (51)	0.3% (7)	13.2% (64)
총계	19.5% (19)	3.1% (17)	76.9% (262)	0.6% (13)	100.0% (311)



주: ( )는 건수

(2015년)

<표 4-13> 생애주기 및 기능별 분류에 따른 전체 예산 및 사업 수 분포 현황  
(단위 : 개)

생애주기 기능	창업	창업 및 성장	성장	퇴로 및 안전망	전체
인력.교육	1.6% (13)	0.2% (4)	1.4% (41)	0.4% (1)	3.6% (59)
금융	10.2% (5)	1.5% (10)	37.0% (53)	27.1% (7)	75.8% (75)
혁신.기술	0.0% (2)	0.1% (1)	5.1% (49)	0.0% (0)	5.2% (52)
마케팅	0.0% (1)	0.0% (0)	0.9% (83)	0.4% (1)	1.3% (85)
인프라	0.3% (4)	0.0% (2)	12.9% (61)	0.9% (10)	14.1% (77)
총계	12.0% (25)	1.8% (17)	57.2% (287)	28.9% (19)	100.0% (348)



(2016년)

<표 4-14> 생애주기 및 기능별 분류에 따른 전체 예산 및 사업 수 분포 현황  
(단위 : 개)

생애주기 기능	창업	창업 및 성장	성장	퇴로 및 안전망	전체
인력.교육	1.7% (10)	0.2% (2)	1.4% (49)	0.4% (1)	3.7% (62)
금융	6.0% (4)	0.9% (9)	61.1% (55)	9.1% (13)	77.1% (81)
혁신.기술	0.0% (0)	0.1% (1)	5.0% (58)	0.0% (0)	5.1% (59)
마케팅	0.0% (2)	0.0% (1)	0.8% (88)	0.3% (1)	1.2% (92)
인프라	0.3% (7)	0.0% (1)	11.6% (65)	1.0% (8)	13.0% (81)
총계	8.0% (23)	1.2% (14)	79.8% (315)	10.9% (23)	100.0% (375)



(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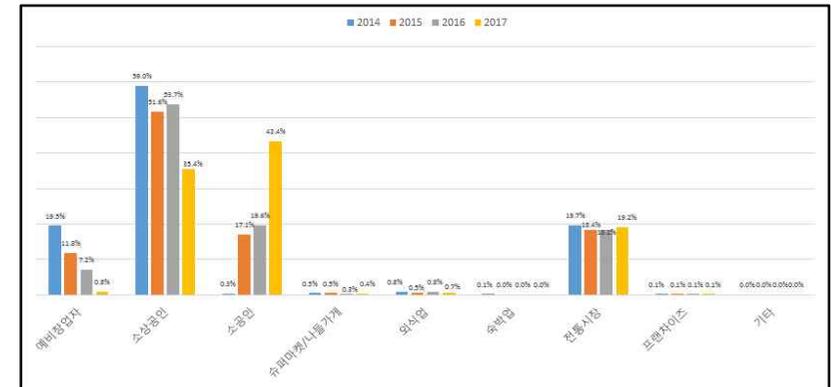
<표 4-15> 생애주기 및 기능별 분류에 따른 전체 예산 및 사업 수 분포 현황  
(단위 : 개)

생애주기 기능	창업	창업 및 성장	성장	퇴로 및 안전망	전체
인력·교육	1.4% (7)	0.2% (2)	1.9% (51)	0.5% (3)	4.1% (63)
금융	27.4% (4)	0.1% (4)	48.6% (52)	0.8% (11)	77.0% (71)
혁신·기술	0.0% (1)	0.3% (5)	4.9% (39)	0.0% (1)	5.2% (46)
마케팅	0.1% (2)	0.0% (1)	1.2% (88)	0.4% (1)	1.7% (92)
인프라	0.1% (1)	0.0% (1)	11.0% (75)	0.9% (10)	12.1% (87)
총계	29.0% (15)	0.7% (13)	67.7% (305)	2.7% (26)	100.0% (359)



(4) 정책대상별

- 소상공인(전체) 대상 예산규모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소상공인 대상 예산 규모는 크게 증가
- 예비창업자 대상 예산규모는 4년 연속 감소되었고, 전통시장 대상 예산규모는 '15년에 증가 후 '16년에 소폭 감소하고 '17년 증가



- 중앙부처의 경우 소상공인(전체)을 대상으로 한 예산규모의 비중이 가장 많고, 소상공인 대상 예산규모는 4년간 크게 증가
- 예비창업자 예산규모는 계속 감소하고 전통시장 대상으로는 계속 증가
- 슈퍼마켓·나들가게 대상 예산규모는 '15년에 증가 후 '16년에 감소하고 '17년 증가, 프랜차이즈 대상 예산규모는 '16년에 증가한 후 유지
- 지자체의 경우, '14년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소상공인(전체) 예산규모는 '15년부터 전통시장 대상 예산규모 보다 적게 편성
-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대상 예산규모는 '16부터 감소하고 있으며 외식업에 대한 예산규모는 '16년까지 증가하다 '17년 소폭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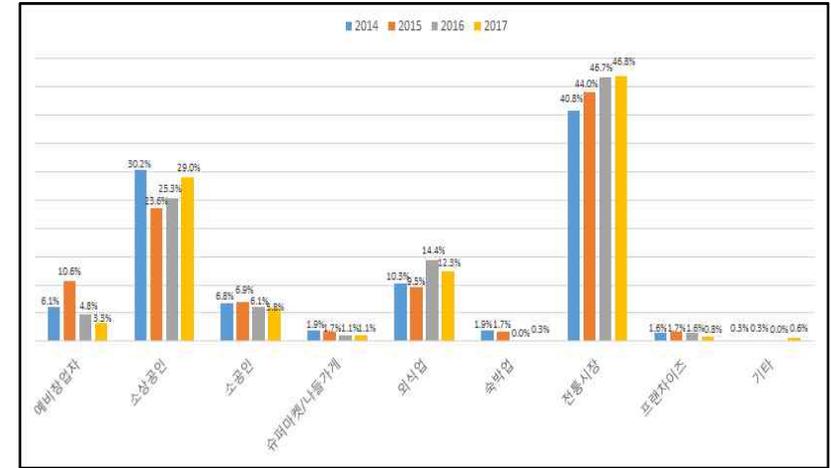
<표 4-16> 정책대상별 예산 분포(금액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예비 창업자	소상공인(전체)	소공인(제조업)	소상공인			전통 시장	프랜차이즈	기타	
				슈퍼마켓/나들가게	외식업	숙박업				
중앙부처	'14	21.9% (3,101)	60.1% (8,532)	0.3% (38)	0.4% (57)	- (-)	- (-)	17.2% (2,444)	0.1% (15)	- (-)
	'15	13.1% (2,654)	53.5% (10,858)	19.0% (3,856)	0.3% (69)	- (-)	- (-)	14.0% (2,839)	0.1% (15)	- (-)
	'16	7.8% (1,623)	54.7% (11,319)	21.5% (4,453)	0.3% (62)	- (-)	- (-)	15.5% (3,219)	0.1% (25)	- (-)
	'17	0.8% (177)	35.2% (7,575)	47.3% (10,175)	0.4% (83)	- (-)	- (-)	16.1% (3,464)	0.1% (25)	- (-)
지자체	'14	0.9% (17)	50.5% (922)	0.8% (15)	1.0% (18)	7.2% (132)	0.6% (12)	38.7% (707)	0.1% (2)	0.0% (0)
	'15	0.7% (17)	35.3% (842)	0.6% (15)	1.7% (41)	5.1% (123)	0.4% (9)	56.0% (1,334)	0.1% (2)	0.0% (0)
	'16	0.7% (14)	43.9% (892)	0.4% (8)	0.2% (5)	9.1% (184)	- (-)	45.6% (926)	0.2% (3)	- (-)
	'17	0.8% (15)	36.6% (720)	0.4% (7)	0.3% (5)	8.4% (166)	0.0% (0.1)	53.4% (1,049)	0.2% (3)	0.0% (0.7)
전체	'14	19.5% (3,118)	59.0% (9,454)	0.3% (53)	0.5% (74)	0.8% (132)	0.1% (12)	19.7% (3,150)	0.1% (17)	0.0% (0)
	'15	11.8% (2,671)	51.6% (11,700)	17.1% (3,871)	0.5% (110)	0.5% (123)	0.0% (9)	18.4% (4,174)	0.1% (17)	0.0% (0)
	'16	7.2% (1,638)	53.7% (12,211)	19.6% (4,461)	0.3% (67)	0.8% (184)	- (-)	18.2% (4,145)	0.1% (28)	- (-)
	'17	0.8% (192)	35.4% (8,295)	43.4% (10,182)	0.4% (88)	0.7% (166)	0.0% (0.1)	19.2% (4,593)	0.1% (28)	0.0% (0.7)

주: ( )는 금액

- 전체 지원사업 중 전통시장 대상 사업수가 가장 많은 비중 차지
  - '14~'17년 전통시장 대상 사업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오다 '17년 다소 감소하는 추세
  - 전반적으로 예비창업자에 대한 사업수는 감소하는 반면,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수는 전반적으로 증가



- 중앙부처의 경우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높으며, 전통시장의 경우 큰 변동 없이 지속되고 있으나 예비창업자에 대한 사업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
  - 전통시장 대상 사업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예비창업자, 소공인 대상 사업은 '15년에 전년 대비 증가 후 '16년 이후 감소
  - 소상공인(전체) 사업수는 '15년에 전년 대비 감소 후 지속적 증가
- 지자체 사업의 경우 전통시장 대상 사업수가 가장 많은 비중
  - '14~'17년 전통시장은 계속 증가한 반면 소상공인(전체) 대상 사업수는 계속 감소하다 '17년 소폭 증가

<표 4-17> 정책대상별 예산 분포(건수기준)

(단위 : 개)

구분	예비 창업자	소상공인 (전체)	소공인 (제조업)	소상공인			전통 시장	프랜 차이즈	기타	
				슈퍼마켓/나들가게	외식업	숙박업				
중앙부처	'14	20.9% (9)	44.2% (19)	9.3% (4)	2.3% (1)	0.0% (0)	0.0% (0)	20.9% (9)	2.3% (1)	0.0% (0)
	'15	39.7% (25)	17.5% (11)	12.7% (8)	1.6% (1)	0.0% (0)	0.0% (0)	27.0% (17)	1.6% (1)	0.0% (0)
	'16	20.0% (14)	42.9% (30)	8.6% (6)	1.4% (1)	0.0% (0)	0.0% (0)	25.7% (18)	1.4% (1)	0.0% (0)
	'17	12.3% (7)	45.6% (26)	10.5% (6)	1.8% (1)	0.0% (0)	0.0% (0)	28.1% (16)	1.8% (1)	0.0% (0)
지자체	'14	3.7% (10)	28.6% (75)	6.3% (17)	1.9% (5)	11.9% (32)	2.2% (6)	44.0% (118)	1.5% (4)	0.4% (1)
	'15	4.2% (12)	24.9% (71)	5.6% (16)	1.8% (5)	11.6% (33)	2.1% (6)	47.7% (136)	1.8% (5)	0.4% (1)
	'16	1.3% (4)	21.3% (65)	5.6% (17)	1.0% (3)	17.7% (54)	0.0% (0)	51.5% (157)	1.6% (5)	0.0% (0)
	'17	1.7% (5)	25.8% (78)	5.0% (15)	1.0% (3)	14.6% (44)	0.3% (1)	50.3% (152)	0.7% (2)	0.7% (2)
전체	'14	6.1% (19)	30.2% (94)	6.8% (21)	1.9% (6)	10.3% (32)	1.9% (6)	40.8% (127)	1.6% (5)	0.3% (1)
	'15	10.6% (37)	23.6% (82)	6.9% (24)	1.7% (6)	9.5% (33)	1.7% (6)	44.0% (153)	1.7% (6)	0.3% (1)
	'16	4.8% (18)	25.3% (95)	6.1% (23)	1.1% (4)	14.4% (54)	0.0% (0)	46.7% (175)	1.6% (6)	0.0% (0)
	'17	3.3% (12)	29.0% (104)	5.8% (21)	1.1% (4)	12.3% (44)	0.3% (1)	46.8% (168)	0.8% (3)	0.6% (2)

주: ( )는 건수

(5) 정책속성별

1) 정부 역할분담별 : 매칭분담과 독자담당형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사업주체가 공동 추진하는 매칭사업의 규모는 전체 예산 규모의 약 20% 내외 수준

- '14~'17년 사이에 중앙부처 사업 중 매칭사업은 약 14~18%내외이며 지자체의 경우 약 35%~65%로 지자체가 중앙부처에 비해 매칭사업을 더 추진

\* 이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간의 매칭사업 유형이 높은 것이 원인으로 자생력이 부족한 지자체가 중앙부처의 의존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도 볼 수 있음

<표 4-18> 매칭·독자담당형 분류에 따른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중앙정부				지자체				전체				
	2014	2015	2016	2017	2014	2015	2016	2017	2014	2015	2016	2017	
매칭분담	18.1% (2,567)	16.3% (3,301)	15.0% (3,105)	14.0% (3,019)	37.3% (680)	64.2% (1,530)	46.7% (949)	42.5% (835)	20.3% (3,248)	21.3% (4,831)	17.8% (4,055)	16.4% (3,854)	
독자담당	중앙정부	81.9% (11,619)	83.7% (16,990)	85.0% (17,595)	86.0% (18,478)	- (-)	- (-)	- (-)	- (-)	72.6% (11,619)	74.9% (16,990)	77.4% (17,595)	78.8% (18,500)
	지자체	- (-)	- (-)	- (-)	- (-)	62.7% (1,144)	35.8% (853)	53.3% (1,083)	57.5% (1,130)	7.1% (1,145)	3.8% (853)	4.8% (1,082)	4.7% (1,109)
총계	100.0% (14,187)	100.0% (20,291)	100.0% (20,700)	100.0% (21,498)	100.0% (1,824)	100.0% (2,383)	100.0% (2,032)	100.0% (1,965)	100.0% (16,011)	100.0% (22,674)	100.0% (22,732)	100.0% (23,463)	

주: ( )는 금액

- 매칭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수는 전체적으로 약 '14%~24%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지자체 사업의 상당 수 차지

- '14~'17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예산 지원사업 사업수의 14%~23%, 지자체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예산 지원사업 사업수의 14%~26%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예산 분담을 통해 추진

<표 4-19> 매칭·독자담당형 분류에 따른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단위 : 개)

구분	중앙정부				지자체				전체				
	2014	2015	2016	2017	2014	2015	2016	2017	2014	2015	2016	2017	
매칭분담	14.0% (6)	22.2% (14)	18.6% (13)	21.1% (12)	14.2% (38)	19.6% (56)	23.9% (73)	25.5% (77)	14.1% (44)	20.1% (70)	22.9% (86)	24.8% (89)	
독자담당	중앙정부	86.0% (37)	77.8% (49)	81.4% (57)	78.9% (45)	- (-)	- (-)	- (-)	- (-)	11.9% (37)	14.1% (49)	15.2% (57)	12.8% (46)
	지자체	- (-)	- (-)	- (-)	- (-)	85.8% (230)	80.4% (229)	76.1% (232)	74.5% (225)	74.0% (230)	65.8% (229)	61.9% (232)	62.4% (224)
총계	100.0% (43)	100.0% (63)	100.0% (70)	100.0% (57)	100.0% (268)	100.0% (285)	100.0% (305)	100.0% (302)	100.0% (311)	100.0% (348)	100.0% (375)	100.0% (359)	

주: ( )는 건수

2) 정부 역할분담별 : 협력·독자·병렬형

○ (금액기준) 협력형의 예산 사업규모는 0.2%-13% 수준

- 중앙부처의 지원사업의 경우 각 지자체와의 사업간 관계에서 병렬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혼합형이 44%~97% 수준

- 지자체의 경우 중앙정부의 지원사업과의 관계에서 21%~28%가 병렬형

<표 4-20> 협력·독자·병렬형 분류에 따른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중앙정부				지자체				전체				
	2014	2015	2016	2017	2014	2015	2016	2017	2014	2015	2016	2017	
협력형	공동	0.2%	6.3%	4.9%	8.3%	37.3%	64.2%	46.2%	37.3%	4.5%	12.3%	8.6%	10.8%
	연계	-	-	-	-	4.6%	3.9%	7.4%	14.1%	0.5%	0.4%	0.7%	1.2%
독자형	2.3%	49.8%	41.0%	49.7%	34.8%	9.1%	25.1%	18.8%	6.0%	45.5%	39.6%	47.0%	
병렬형	-	-	-	-	23.3%	22.8%	21.3%	28.7%	2.7%	2.4%	1.9%	2.4%	
혼합형	97.5%	44.0%	54.1%	41.9%	-	-	-	1.1%	86.4%	39.3%	49.3%	38.5%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는 금액

○ (건수기준) 협력형의 사업수 비중은 20%내 수준

- 중앙부처의 지원사업의 경우 독자형 사업수의 비중이 48%-58% 수준이고 혼합형도 38-49% 수준

- 지자체의 경우 중앙정부의 지원사업과의 관계에서 병렬형이 19%-36% 수준

<표 4-21> 협력·독자·병렬형 분류에 따른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단위 : 개)

구분	중앙정부				지자체				전체				
	2014	2015	2016	2017	2014	2015	2016	2017	2014	2015	2016	2017	
협력형	공동	2.3%	7.9%	4.3%	12.3%	14.2%	20.1%	22.6%	21.2%	12.5%	17.5%	19.2%	19.2%
	연계	-	-	-	-	16.8%	14.0%	16.1%	16.6%	14.5%	11.5%	13.1%	13.9%
독자형	48.8%	52.4%	57.1%	52.6%	38.4%	31.2%	42.3%	37.7%	39.9%	35.1%	45.1%	40.7%	
병렬형	-	-	-	-	30.6%	35.1%	19.0%	24.2%	26.4%	28.7%	15.5%	20.3%	
혼합형	48.8%	39.7%	38.6%	35.1%	-	-	-	0.3%	6.8%	7.2%	7.2%	5.8%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는 건수

3) 정책목표별

○ (금액기준) 소상공인 예산사업의 대부분은 적응정책

- 중앙부처의 지원사업은 99% 이상이 적응정책이고 일부 보호정책 및 불리시정정책으로 구분되며 지자체의 지원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적응정책에 해당

<표 4-22> 정책목표별 분류에 따른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중앙정부				지자체				전체			
	2014	2015	2016	2017	2014	2015	2016	2017	2014	2015	2016	2017
보호정책	0.4%	0.5%	0.4%	0.5%	0.0%	0.0%	0.1%	0.2%	0.4%	0.4%	0.4%	0.5%
적응정책	99.2%	99.4%	99.3%	99.5%	100.0%	100.0%	99.9%	99.8%	99.2%	99.4%	99.4%	99.5%
불리시정정책	0.4%	0.2%	0.2%	-	-	-	-	-	0.4%	0.2%	0.1%	-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는 금액

○ (건수기준)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사업수 98% 정도가 적응정책이고 보호정책이 1.5% 내외를 차지

- 중앙부처의 지원사업은 지자체 지원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호나 불리시정 정책의 사업수 비중이 많고 지자체의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적응정책의 사업 수 비중이 많음

<표 4-23> 정책목표별 분류에 따른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단위 : 개)

구분	중앙정부				지자체				전체			
	2014	2015	2016	2017	2014	2015	2016	2017	2014	2015	2016	2017
보호정책	4.7%	4.8%	2.9%	3.5%	1.1%	1.1%	1.0%	0.3%	1.6%	1.7%	1.3%	0.8%
	(2)	(3)	(2)	(2)	(3)	(3)	(3)	(1)	(5)	(6)	(5)	(3)
적응정책	93.0%	93.7%	95.7%	96.5%	98.9%	98.9%	99.0%	99.7%	98.1%	98.0%	98.4%	99.2%
	(40)	(59)	(67)	(55)	(265)	(282)	(302)	(301)	(305)	(341)	(369)	(356)
불리시정정책	2.3%	1.6%	1.4%	-	-	-	-	-	0.3%	0.3%	0.3%	-
	(1)	(1)	(1)	(-)	(-)	(-)	(-)	(-)	(1)	(1)	(1)	(-)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3)	(63)	(70)	(57)	(268)	(285)	(305)	(302)	(311)	(348)	(375)	(359)

주: ( )는 건수

## 제5장 중앙·지자체간 소상공인 정책 전달체계 및 정책과제

### 1. 정책 연계성과 유사·중복성 문제

○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사업전개와 예산정책 성격을 살펴보면, 중앙부처 사업은 대부분이 독자 형태로 특정 지역에 보다는 전국에서 운영

- 지자체 사업은 지자체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중앙부처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중앙부처 사업에 신청하여 수행하는 경우도 존재

- 최근 중앙정부의 사업 중 지자체와의 협력하는 경우 단순 예산지원 보다는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이 함께 추진하며 독자형보다는 협력형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가 증가하는 추세

- 이는 제3장에서 제시한 예산분담과 실행주체 간의 정책 특성을 포괄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독자형 사업의 경우 대다수가 소상공인 지원 사각지대 대상이거나, 정부의 국정철학을 수반하는 사업이 증가 추세

\* 중앙부처 독자형 사업 : 예비창업자 교육, 공동구매 등 공동마케팅, 창업 및 경영컨설팅, 인프라 중 소상공인 정보조사 및 연구전파, 지원용자의 이차보전 사업 등 협업체계의 구축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어려운 사업에 대한 지원이 다수

\* 지자체 독자형 사업 : 중앙부처와 유사한 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한 특화 교육, 홍보프로그램, 전시장 운영 건립 등 지자체가 운영하는 독립적 요소에 대한 지역내 소상공인 지원이 다수

<표 5-1> 예산분담 또는 실행주체에 따른 정책의 특성

구분		협력형	독자형	병렬형
매칭분담	중앙정부·지자체	○	-	-
독자담당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	사각지대 해소	유사·중복

○ 병렬형의 경우 유사중복사업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대부분 지자체 사업에서 해당하며, 지역 간 유사중복은 대상이 지역별로 달라 발생하지 않지만, 중앙부처와의 중복 발생 가능성이 존재

- 현재 지자체의 병렬형 사업은 73개 사업으로 교육지원사업, 행사성사업, 이차보전 등으로 대부분 중앙부처와의 명확한 역할 분장 미흡에서 발생
- 하지만 예산에 비해 소상공인 수가 많은 것을 생각하면, 유사중복사업이 중앙부처 사업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수행
- 다만, 일부 소상공인에 지원이 집중되면 사업에 대한 불신을 제기할 수 있어 과거 지원이력을 미리 점검하여 중복을 줄이는 노력은 필요

## 2. 기업생태계적 전환의 필요성

-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사회안정망과 같이 서민의 생활을 안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기업생태계의 하부구조 역할로 중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창업과 일자리 창출 기능 부각
- 하지만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예산은 대부분 소상공인의 안정한 성장을 위한 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창업이후 성장까지 이어지는 지원은 미약한 실정으로 소상공인의 창업 후 5년내 생존률이 30% 미만임을 감안하면 소상공인의 안정한 사업유지를 위한 창업과 성장에 대한 지원사업의 전개가 필요

\* '17년 창업 및 성장 지원사업 : 중앙부처 : 5개 사업, 지자체 8개 사업



- 특히 지자체 사업의 경우 다수의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소상공인의 기업성장단계를 고려하기 보다는 실적위주가 많아 중장기 관점에서 기획과 운영이 필요한 시점
- \* 지자체 사업의 대다수는 일회성 또는 행사성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다수로 오히려, 지역특성과 연계한 사업기획 및 추진을 통해 소상공인이 지속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 필요

## 3. 정책의 연계성 분석 및 시사점

### (1) 정책의 연계성 현황

- (금액기준) '17년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매칭사업은 16.4% 미만
- 중앙부처와 지자체 독자사업은 47% 미만이고, 유사중복사업은 2.4% 미만

<표 5-2> 정책의 연계성 및 유사·중복성 평가(2017년 금액기준)

(단위 : 억 원)

구분		공동협력	연계협력	독자형	병렬형	혼합형	전체
매칭분담	중앙정부·지자체	10.8% (2,545)	0.2% (36)	- (-)	0.2% (48)	5.2% (1,226)	16.4% (3,854)
	독자담당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 (-)	1.0% (242)	47.0% (11,039)	2.2% (563)	33.3% (9,039)	83.6% (19,609)
총계		10.8% (2,545)	1.2% (277)	47.0% (11,039)	2.4% (563)	38.5% (9,039)	100.0% (23,463)

주: ( )는 금액

- (건수기준) '17년 중앙부처와 지자체간에 협력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24.8%내 정도
- 중앙부처와 지자체간에 독자적인 사업은 40.7%내 수준
- 중앙부처와 지자체간에 유사·중복적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사업이 20.3%내 수준

<표 5-3> 정책의 연계성 및 유사·중복성 평가(2017년 건수기준)

(단위 : 개)

구분		공동협력	연계협력	독자형	병렬형	혼합형	전체
매칭분담	중앙정부·지자체	18.4% (66)	2.2% (8)	1.4% (5)	1.4% (5)	1.4% (5)	24.8% (89)
	독자담당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0.8% (3)	11.7% (42)	39.3% (141)	18.9% (68)	4.5% (16)	75.2% (270)
총계		19.2% (69)	13.9% (50)	40.7% (146)	20.3% (73)	5.8% (21)	100.0% (359)

주: ( )는 건수

- (대상기준) '17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간의 유사중복성은 지자체간에는 지역 대상의 범주가 명확하여 발생하지 않지만 중앙부처와 지자체간에는 대상범주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유사중복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 (전통시장) 중앙부처의 경우 대규모 시설현대화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지자체는 마케팅 지원 및 조직화 지원을 운영 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자체 및 중앙부처 모두 대상범위가 대부분 공모방식으로 운영하여 특정 전통시장을 선정하는 경우는 소수
  - 유사중복에 해당하는 병렬형의 경우 대다수가 전통시장지원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중앙부처의 경우 대상 범주가 전국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
  - 이로 인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병렬형은 전통시장이 39개사(54.2%)로 가장 높으며, 전통시장의 대규모 사업의 경우 중앙부처가 운영하나, 기타 마케팅지원 및 조직화 등 소규모 지원은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실정
  - 특히 서울(서울풀물시장, 동대문벼룩시장 등), 대구(서문시장)등의 일부지자체를 제외하고는 특정 전통시장을 지정하기 보다는 대부분이 지역 도내시장을 포괄하는 형태로 신청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
- (소상공인) 대다수가 용자 보전형태인 이차보전 지원이 다수이며, 다음으로 협업화 및 컨설팅지원이 다수이며 일부 숙박업, 음식점업을 대상으로 하는 용자도 존재
  - 대상범위에 있어 세부업종을 나타내는 경우는 극소수로 3개 사업이 음식점업 및 숙박업에 대한 지원을 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영세 소상공인,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

구분	전통시장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슈퍼마켓/나들가게	프랜차이즈	전체
병렬형 대상	54.17% (39)	38.89% (28)	5.56% (4)	1.39% (1)	1.39% (1)	100% (72)

- 현재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가장 큰 특징을 대상에 대한 세분화 보다는 영세소상공인의 안전한 경영환경 구축을 위한 사회 안전망 성격에 초점을 이루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소상공인에 대한 보편적 지원보다는 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소상공인의 성장지원체계의 구축이 요구

(2) 정책 시사점

- 유사중복이 발생하는 병렬형 사업은 금액기준으로는 2.4%인 반면 사업수 기준으로는 20.3%로 지자체와 중앙부처간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성은 확보하고 있지만 사업운용의 효율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지자체 사업이 지역특색 및 중앙부처와의 차별성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중앙부처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소상공인지원사업의 조정·평가에 대한 컨트롤 타워의 부재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
-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지원사업 유사중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업무영역 분장 필요
  -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기업생태계측면에서 보면 성장단계의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창업기 지원에 대해 중앙부처의 지원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양상
  - 하지만, 성장과 이어지는 창업 및 성장 단계를 이어주는 사업이 3.6% 수준으로 소상공인 생태계 관점에서 생존을 증진을 위해서는 창업 및 성장 단계 사업이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할 필요
-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소상공인의 생태계를 안정하게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부처는 소상공인의 미래지향성을 고려한 사업 발굴과 안전망 구축을 중점 지원하고 지자체는 지역특색을 감안한 중앙부처와 차별화된 지원사업의 운영이 필요
  - 중앙부처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영위하여 성장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을 투입하거나 도전하는 신규사업에 투자위주의 사업진행이 필요
  - 지자체는 지역별 산업구조의 특성에 따라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고 현장 중심의 소상공인 밀착형 사업 전개가 필요

(3)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보완사항

- **(한계점)** 본 연구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유형분류를 통한 지원예산 및 사업의 현황 파악이 주 목적
  - 현재 지원사업의 현황정보만을 기준으로 지원기업의 성과를 분석하는 한계가 있으나,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성장위주의 지원에서 최근 예비창업자 및 창업에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원사업 포트폴리오가 다양화 되고 예산 운영이 보다 효율적으로 기획되고 있다 할 수 있음
  - 또한 향후에는 소상공인의 안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과 성장의 가교로서 창업 및 성장지원에 대한 사업을 개발하여 보다 안정적인 소상공인의 생태계 조성이 필요

구분	창업	창업 및 성장	성장	퇴로 및 안전망	
전체	'14	19.5% (3,119)	3.1% (492)	76.9% (12,305)	0.6% (96)
	'15	12.0% (2,724)	1.8% (411)	57.2% (12,980)	28.9% (6,560)
	'16	8.0% (1,829)	1.2% (277)	79.8% (18,149)	10.9% (2,477)
	'17	29.0% (6,798)	0.7% (164)	67.7% (15,876)	2.7% (625)

- 다만, 이러한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원사업 수혜기업의 재무정보(매출, 고용, 휴폐업 등)를 기준으로 보다 사업별 심층분석이 요구되나, 본 연구에서는 수혜기업의 경영성과분석이 실시되지 않아 지원사업 현황 조사에만 국한된 한계점 존재

- **(향후 보완사항)**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효과적 사업전개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원사업 수혜기업의 심층분석 및 만족도 조사가 필요
  - 따라서,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원사업을 수혜 받은 기업의 경영성과인 재무정보를 기준으로 지원이전과 이후, 지원기업과 비지원기업의 비교 분석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지원사업 전략적 운영방안의 마련이 필요
  - 지원사업의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수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만족도(사업절차프로세스, 사업만족도 등)평가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차원에서 지원사업의 개선안 마련도 필요

<부록> 복합적인 주요 유형분류별 현황 : 2017년 기준

(1) 생애주기 및 기능별

1) 금액기준

<부록 1-1-1> 생애주기 및 기능별 분류에 따른 중앙부처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단위 : 억 원)

생애주기 기능	창업	창업 및 성장	성장	퇴로 및 안전망	전체
금융	29.9% (6,420)	- (-)	50.3% (10,822)	0.5% (100)	80.7% (17,342)
마케팅	- (-)	- (-)	0.6% (130)	0.4% (93)	1.0% (223)
인력·교육	1.5% (332)	- (-)	1.9% (403)	0.6% (121)	4.0% (857)
인프라	0.1% (18)	- (-)	8.4% (1,810)	0.8% (176)	9.3% (2,004)
혁신·기술	- (-)	0.3% (72)	4.6% (997)	0.0% (3)	5.0% (1,072)
총계	31.5% (6,770)	0.3% (72)	65.9% (14,161)	2.3% (494)	100.0% (21,498)

주: ( )는 금액

<부록 1-1-2> 생애주기 및 기능별 분류에 따른 지자체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단위 : 억 원)

생애주기 기능	창업	창업 및 성장	성장	퇴로 및 안전망	전체
인력·교육	0.6% (13)	1.6% (31)	29.5% (580)	4.6% (91)	36.4% (715)
금융	0.7% (14)	- (-)	7.9% (154)	- (-)	8.6% (169)
혁신·기술	- (-)	2.7% (54)	2.4% (47)	- (-)	5.1% (101)
마케팅	- (-)	0.3% (7)	39.6% (778)	2.0% (40)	41.9% (824)
인프라	0.1% (1)	- (-)	7.9% (156)	- (-)	8.0% (157)
총계	1.4% (28)	4.7% (92)	87.2% (1,715)	6.6% (131)	100.0% (1,965)

주: ( )는 금액

<부록 1-1-3> 생애주기 및 기능별 분류에 따른 전체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단위 : 억 원)

생애주기 기능	창업	창업 및 성장	성장	퇴로 및 안전망	전체
인력.교육	27.4% (6,433)	0.1% (31)	48.6% (11,402)	0.8% (191)	77.0% (18,057)
금융	0.1% (14)	- (-)	1.2% (284)	0.4% (93)	1.7% (392)
혁신.기술	1.4% (332)	0.2% (54)	1.9% (450)	0.5% (121)	4.1% (957)
마케팅	0.1% (18)	0.0% (7)	11.0% (2,588)	0.9% (216)	12.1% (2,828)
인프라	0.0% (1)	0.3% (72)	4.9% (1,152)	0.0% (3)	5.2% (1,229)
총계	29.0% (6,799)	0.7% (164)	67.7% (15,876)	2.7% (624)	100.0% (23,463)

주: ( )는 금액

2) 건수기준

<부록 1-2-1> 생애주기 및 기능별 분류에 따른 중앙부처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단위 : 개)

생애주기 기능	창업	창업 및 성장	성장	퇴로 및 안전망	전체
인력.교육	3.5% (2)	- (-)	7.0% (4)	5.3% (3)	15.8% (9)
금융	- (-)	- (-)	5.3% (3)	1.8% (1)	7.0% (4)
혁신.기술	10.5% (6)	- (-)	8.8% (5)	5.3% (3)	24.6% (14)
마케팅	1.8% (1)	- (-)	17.5% (10)	3.5% (2)	22.8% (13)
인프라	- (-)	8.8% (5)	19.3% (11)	1.8% (1)	29.8% (17)
총계	15.8% (9)	8.8% (5)	57.9% (33)	17.5% (10)	100.0% (57)

주: ( )는 건수

<부록 1-2-2> 생애주기 및 기능별 분류에 따른 지자체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단위 : 개)

생애주기 기능	창업	창업 및 성장	성장	퇴로 및 안전망	전체
인력.교육	0.7% (2)	1.3% (4)	15.9% (48)	2.6% (8)	20.5% (62)
금융	0.7% (2)	0.3% (1)	28.1% (85)	- (-)	29.1% (88)
혁신.기술	0.3% (1)	0.7% (2)	15.2% (46)	- (-)	16.2% (49)
마케팅	- (-)	0.3% (1)	21.5% (65)	2.6% (8)	24.5% (74)
인프라	0.3% (1)	- (-)	9.3% (28)	- (-)	9.6% (29)
총계	2.0% (6)	2.6% (8)	90.1% (272)	5.3% (16)	100.0% (302)

주: ( )는 건수

<부록 1-2-3> 생애주기 및 기능별 분류에 따른 전체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단위 : 개)

생애주기 기능	창업	창업 및 성장	성장	퇴로 및 안전망	전체
인력.교육	1.1% (4)	1.1% (4)	14.5% (52)	3.1% (11)	19.8% (71)
금융	0.6% (2)	0.3% (1)	24.5% (88)	0.3% (1)	25.6% (92)
혁신.기술	1.9% (7)	0.6% (2)	14.2% (51)	0.8% (3)	17.5% (63)
마케팅	0.3% (1)	0.3% (1)	20.9% (75)	2.8% (10)	24.2% (87)
인프라	0.3% (1)	1.4% (5)	10.9% (39)	0.3% (1)	12.8% (46)
총계	4.2% (15)	3.6% (13)	85.0% (305)	7.2% (26)	100.0% (359)

주: ( )는 건수

(2) 생애주기 및 정책대상별

1) 금액기준

<부록 2-1-1> 생애주기 및 정책대상별 분류에 따른 중앙부처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단위 : 억 원)

생애주기 정책대상	창업	창업 및 성장	성장	퇴로 및 안전망	전체
소공인	- (-)	- (-)	46.1% (9,906)	1.3% (269)	47.3% (10,175)
소상공인	29.8% (6,400)	0.3% (72)	4.1% (888)	1.0% (214)	35.2% (7,575)
슈퍼마켓 /나들가게	- (-)	- (-)	0.4% (83)	- (-)	0.4% (83)
예비창업자	0.8% (177)	- (-)	- (-)	- (-)	0.8% (177)
전통시장	0.9% (194)	- (-)	15.2% (3,260)	0.0% (11)	16.1% (3,464)
프랜차이즈	- (-)	- (-)	0.1% (25)	- (-)	0.1% (25)
총계	31.5% (6,770)	0.3% (72)	65.9% (14,161)	2.3% (494)	100.0% (21,498)

주: ( )는 금액

<부록 2-1-2> 생애주기 및 정책대상별 분류에 따른 지자체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단위 : 억 원)

생애주기 정책대상	창업	창업 및 성장	성장	퇴로 및 안전망	전체
미용업	- (-)	- (-)	- (-)	- (-)	- (-)
소공인	- (-)	- (-)	0.4% (7)	- (-)	0.4% (7)
소상공인	- (-)	4.7% (92)	27.3% (537)	4.7% (92)	36.6% (720)
숙박업	- (-)	- (-)	0.0% (0)	- (-)	- (-)
슈퍼마켓 /나들가게	- (-)	- (-)	0.1% (2)	0.1% (2)	0.2% (5)
예비창업자	0.8% (15)	- (-)	- (-)	- (-)	0.8% (15)
외식업	- (-)	- (-)	8.4% (166)	- (-)	8.5% (166)
전통시장	0.7% (14)	- (-)	50.8% (999)	1.9% (36)	53.4% (1,049)
제빵업	- (-)	- (-)	0.0% (1)	- (-)	0.0% (1)
프랜차이즈	- (-)	- (-)	0.1% (3)	- (-)	0.1% (3)
총계	1.4% (28)	4.7% (92)	87.2% (1,715)	6.6% (131)	100.0% (1,965)

주: ( )는 금액

<부록 2-1-3> 생애주기 및 정책대상별 분류에 따른 전체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단위 : 억 원)

생애주기 정책대상	창업	창업 및 성장	성장	퇴로 및 안전망	전체
미용업	- (-)	- (-)	0.0% (20)	- (-)	- (-)
소공인	- (-)	- (-)	42.2% (9,913)	1.1% (269)	43.4% (10,182)
소상공인	27.3% (6,400)	0.7% (164)	6.1% (1,425)	1.3% (306)	35.4% (8,295)
숙박업	- (-)	- (-)	- (-)	- (-)	- (-)
슈퍼마켓 /나들가게	- (-)	- (-)	0.4% (85)	0.0% (2)	0.4% (87)
예비창업자	0.8% (191)	- (-)	- (-)	- (-)	0.8% (191)
외식업	- (-)	- (-)	0.7% (166)	- (-)	0.7% (166)
전통시장	0.9% (207)	- (-)	18.2% (4,260)	0.2% (47)	19.2% (4,514)
제빵업	- (-)	- (-)	0.0% (1)	- (-)	0.0% (1)
프랜차이즈	- (-)	- (-)	0.1% (27)	- (-)	0.1% (27)
총계	29.0% (6,799)	0.7% (164)	67.7% (15,876)	2.7% (624)	100.0% (23,463)

주: ( )는 금액

2) 건수기준

<부록 2-2-1> 생애주기 및 정책대상별 분류에 따른 중앙부처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단위 : 개)

생애주기 정책대상	창업	창업 및 성장	성장	퇴로 및 안전망	전체
소공인	- (-)	- (-)	5.3% (3)	5.3% (3)	10.5% (6)
소상공인	1.8% (1)	8.8% (5)	24.6% (14)	10.5% (6)	45.6% (26)
슈퍼마켓/나들가게	- (-)	- (-)	1.8% (1)	- (-)	1.8% (1)
예비창업자	12.3% (7)	- (-)	- (-)	- (-)	12.3% (7)
전통시장	1.8% (1)	- (-)	24.6% (14)	1.8% (1)	28.1% (16)
프랜차이즈	- (-)	- (-)	1.8% (1)	- (-)	1.8% (1)
총계	15.8% (9)	8.8% (5)	57.9% (33)	17.5% (10)	100.0% (57)

주: ( )는 건수

<부록 2-2-2> 생애주기 및 정책대상별 분류에 따른 지자체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단위 : 개)

생애주기 정책대상	창업	창업 및 성장	성장	퇴로 및 안전망	전체
미용업	- (-)	- (-)	100.0% (1)	- (-)	100.0% (1)
소공인	- (-)	- (-)	100.0% (15)	- (-)	100.0% (15)
소상공인	- (-)	9.0% (7)	80.8% (63)	10.3% (8)	100.0% (78)
숙박업	- (-)	- (-)	100.0% (1)	- (-)	100.0% (1)
슈퍼마켓 /나들가게	- (-)	- (-)	66.7% (2)	33.3% (1)	100.0% (3)
예비창업자	100.0% (5)	- (-)	- (-)	- (-)	100.0% (5)
외식업	- (-)	2.3% (1)	97.7% (43)	- (-)	100.0% (44)
전통시장	0.7% (1)	- (-)	94.7% (144)	4.6% (7)	100.0% (152)
제빵업	- (-)	- (-)	100.0% (1)	- (-)	100.0% (1)
프랜차이즈	- (-)	- (-)	100.0% (2)	- (-)	100.0% (2)
총계	2.0% (6)	2.6% (8)	90.1% (272)	5.3% (16)	100.0% (302)

주: ( )는 건수

<부록 2-2-3> 생애주기 및 정책대상별 분류에 따른 전체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단위 : 개)

생애주기 정책대상	창업	창업 및 성장	성장	퇴로 및 안전망	전체
미용업	- (-)	- (-)	0.3% (1)	- (-)	0.3% (1)
소공인	- (-)	- (-)	5.0% (18)	0.8% (3)	5.8% (21)
소상공인	0.3% (1)	3.3% (12)	21.4% (77)	3.9% (14)	29.0% (104)
숙박업	- (-)	- (-)	0.3% (1)	- (-)	0.3% (1)
슈퍼마켓 /나들가게	- (-)	- (-)	0.8% (3)	0.3% (1)	1.1% (4)
예비창업자	3.3% (12)	- (-)	- (-)	- (-)	3.3% (12)
외식업	- (-)	0.3% (1)	12.0% (43)	- (-)	12.3% (44)
전통시장	0.6% (2)	- (-)	44.0% (158)	2.2% (8)	46.8% (168)
제빵업	- (-)	- (-)	0.3% (1)	- (-)	0.3% (1)
프랜차이즈	- (-)	- (-)	0.8% (3)	- (-)	0.8% (3)
총계	4.2% (15)	3.6% (13)	85.0% (305)	7.2% (26)	100.0% (359)

주: ( )는 건수

(3) 기능 및 정책대상별

1) 금액기준

<부록 3-1-1> 기능 및 정책대상별 분류에 따른 중앙부처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단위 : 억 원)

정책대상	기능	금융	마케팅	인력·교육	인프라	혁신·기술	전체
소공인		45.8% (9,850)	0.4% (93)	- (-)	0.8% (176)	0.3% (56)	47.3% (10,175)
소상공인		32.1% (6,907)	0.1% (27)	1.1% (243)	0.2% (37)	1.7% (360)	35.2% (7,575)
슈퍼마켓/나들가게		- (-)	- (-)	0.4% (83)	- (-)	- (-)	0.4% (83)
예비창업자		0.1% (20)	- (-)	0.6% (138)	0.1% (18)	- (-)	0.8% (177)
전통시장		2.6% (565)	0.5% (103)	1.8% (392)	8.2% (1,774)	2.9% (631)	16.1% (3,464)
프랜차이즈		- (-)	- (-)	- (-)	- (-)	0.1% (25)	0.1% (25)
총계		80.7% (17,342)	1.0% (223)	4.0% (857)	9.3% (2,004)	5.0% (1,072)	100.0% (21,498)

주: ( )는 금액

<부록 3-1-2> 기능 및 정책대상별 분류에 따른 지자체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단위 : 억 원)

정책대상	기능	금융	마케팅	인력·교육	인프라	혁신·기술	전체
미용업		- (-)	- (-)	- (-)	- (-)	- (-)	- (-)
소공인		- (-)	0.2% (4)	- (-)	0.1% (2)	0.1% (1)	0.4% (7)
소상공인		28.6% (562)	0.2% (5)	3.6% (70)	3.3% (65)	0.9% (18)	36.6% (720)
숙박업		- (-)	- (-)	- (-)	- (-)	- (-)	- (-)
슈퍼마켓 /나들가게		- (-)	- (-)	- (-)	0.1% (2)	0.1% (2)	0.2% (5)
예비창업자		0.6% (13)	0.0% (1)	- (-)	- (-)	0.1% (1)	0.8% (15)
외식업		6.9% (135)	0.8% (16)	0.2% (4)	0.4% (7)	0.2% (5)	8.5% (166)
전통시장		0.2% (5)	7.3% (143)	1.2% (24)	38.1% (749)	6.6% (129)	53.4% (1,049)
제빵업		- (-)	0.0% (1)	- (-)	- (-)	- (-)	0.0% (1)
프랜차이즈		- (-)	- (-)	0.1% (2)	- (-)	0.0% (1)	0.1% (3)
총계		36.4% (715)	8.6% (169)	5.1% (101)	41.9% (824)	8.0% (157)	100.0% (1,965)

주: ( )는 건수

<부록 3-1-3> 기능 및 정책대상별 분류에 따른 전체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단위 : 억 원)

정책대상 \ 기능	금융	마케팅	인력·교육	인프라	혁신·기술	전체
미용업	- (-)	- (-)	- (-)	- (-)	- (-)	- (-)
소공인	42.0% (9,850)	0.4% (97)	0.0% (-)	0.8% (177)	0.2% (57)	43.4% (10,182)
소상공인	31.8% (7,470)	0.1% (32)	1.3% (314)	0.4% (101)	1.6% (378)	35.4% (8,295)
숙박업	- (-)	- (-)	- (-)	- (-)	- (-)	- (-)
슈퍼마켓 /나들가게	- (-)	- (-)	0.4% (83)	0.0% (2)	0.0% (2)	0.4% (87)
예비창업자	0.1% (33)	0.0% (1)	0.6% (139)	0.1% (18)	0.0% (1)	0.8% (191)
외식업	0.6% (135)	0.1% (16)	0.0% (4)	0.0% (7)	0.0% (5)	0.7% (166)
전통시장	2.4% (569)	1.0% (246)	1.8% (416)	10.8% (2,522)	3.2% (760)	19.2% (4,514)
제빵업	- (-)	0.0% (1)	- (-)	- (-)	- (-)	0.0% (1)
프랜차이즈	- (-)	- (-)	0.0% (2)	- (-)	0.1% (25)	0.1% (27)
총계	77.0% (18,057)	1.7% (392)	4.1% (957)	12.1% (2,828)	5.2% (1,229)	100.0% (23,436)

주: ( )는 금액

## 2) 건수기준

<부록 3-2-1> 기능 및 정책대상별 분류에 따른 중앙부처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단위 : 개)

정책대상 \ 기능	금융	마케팅	인력·교육	인프라	혁신·기술	전체
소공인	1.8% (1)	1.8% (1)	- (-)	3.5% (2)	3.5% (2)	10.5% (6)
소상공인	8.8% (5)	1.8% (1)	10.5% (6)	5.3% (3)	19.3% (11)	45.6% (26)
슈퍼마켓/나들가게	- (-)	- (-)	1.8% (1)	- (-)	- (-)	1.8% (1)
예비창업자	1.8% (1)	- (-)	8.8% (5)	1.8% (1)	- (-)	12.3% (7)
전통시장	3.5% (2)	3.5% (2)	3.5% (2)	12.3% (7)	5.3% (3)	28.1% (16)
프랜차이즈	- (-)	- (-)	- (-)	- (-)	1.8% (1)	1.8% (1)
총계	15.8% (9)	7.0% (4)	24.6% (14)	22.8% (13)	29.8% (17)	100.0% (57)

주: ( )는 건수

<부록 3-2-2> 기능 및 정책대상별 분류에 따른 지자체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단위 : 개)

정책대상 \ 기능	금융	마케팅	인력·교육	인프라	혁신·기술	전체
미용업	- (-)	- (-)	0.3% (1)	- (-)	- (-)	0.3% (1)
소공인	- (-)	3.0% (9)	- (-)	0.7% (2)	1.3% (4)	5.0% (15)
소상공인	11.6% (35)	1.7% (5)	4.6% (14)	4.3% (13)	3.6% (11)	25.8% (78)
숙박업	0.3% (1)	- (-)	- (-)	- (-)	- (-)	0.3% (1)
슈퍼마켓 /나들가게	- (-)	- (-)	0.3% (1)	0.3% (1)	0.3% (1)	1.0% (3)
예비창업자	0.7% (2)	0.3% (1)	0.3% (1)	- (-)	0.3% (1)	1.7% (5)
외식업	6.0% (18)	4.3% (13)	1.7% (5)	1.3% (4)	1.3% (4)	14.6% (44)
전통시장	2.0% (6)	19.2% (58)	8.9% (27)	17.9% (54)	2.3% (7)	50.3% (152)
제빵업	- (-)	0.3% (1)	- (-)	- (-)	- (-)	0.3% (1)
프랜차이즈	- (-)	0.3% (1)	- (-)	- (-)	0.3% (1)	0.7% (2)
총계	20.5% (62)	29.1% (88)	16.2% (49)	24.5% (74)	9.6% (29)	100.0% (302)

주: ( )는 건수

<부록 3-2-3> 기능 및 정책대상별 분류에 따른 전체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단위 : 개)

정책대상 \ 기능	금융	마케팅	인력·교육	인프라	혁신·기술	전체
미용업	- (-)	- (-)	0.3% (1)	- (-)	- (-)	0.3% (1)
소공인	0.3% (1)	2.8% (10)	- (-)	1.1% (4)	1.7% (6)	5.8% (21)
소상공인	11.1% (40)	1.7% (6)	5.6% (20)	4.5% (16)	6.1% (22)	29.0% (104)
숙박업	0.3% (1)	- (-)	- (-)	- (-)	- (-)	0.3% (1)
슈퍼마켓 /나들가게	- (-)	- (-)	0.6% (2)	0.3% (1)	0.3% (1)	1.1% (4)
예비창업자	0.8% (3)	0.3% (1)	1.7% (6)	0.3% (1)	0.3% (1)	3.3% (12)
외식업	5.0% (18)	3.6% (13)	1.4% (5)	1.1% (4)	1.1% (4)	12.3% (44)
전통시장	2.2% (8)	16.7% (60)	8.1% (29)	17.0% (61)	2.8% (10)	46.8% (168)
제빵업	- (-)	0.3% (1)	- (-)	- (-)	- (-)	0.3% (1)
프랜차이즈	- (-)	0.3% (1)	- (-)	- (-)	0.6% (2)	0.8% (3)
총계	19.8% (71)	25.6% (92)	17.5% (63)	24.2% (87)	12.8% (46)	100.0% (359)

주: ( )는 건수

(4) 정부 역할분담 및 정책목표별

1) 금액기준

<부록 4-1-1> 정부 역할분담 및 정책목표별 분류에 따른 중앙부처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단위 : 억 원)

구분	협력형		독자형	병렬형	혼합형	전체
	공동	연계				
보호정책	- (-)	- (-)	0.1% (31)	- (-)	0.4% (83)	0.5% (113)
적응정책	8.3% (1,794)	- (-)	49.6% (10,657)	- (-)	41.6% (8,934)	99.5% (21,384)
불리시정정책	- (-)	- (-)	- (-)	- (-)	- (-)	- (-)
총계	8.3% (1,794)	- (-)	49.7% (10,687)	- (-)	41.9% (9,017)	100.0% (21,498)

주: ( )는 금액

<부록 4-1-2> 정부 역할분담 및 정책목표별 분류에 따른 지자체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단위 : 억 원)

구분	협력형		독자형	병렬형	혼합형	전체
	공동	연계				
보호정책	- (-)	- (-)	0.1% (1)	0.1% (2)	- (-)	0.1% (3)
적응정책	37.3% (733)	14.1% (277)	18.7% (368)	28.6% (562)	1.1% (22)	99.8% (1,962)
불리시정정책	- (-)	- (-)	- (-)	0.0% (-)	- (-)	- (-)
총계	37.3% (733)	14.1% (277)	18.7% (370)	28.7% (563)	1.1% (22)	100.0% (1,965)

주: ( )는 금액

<부록 4-1-3> 정부 역할분담 및 정책목표별 분류에 따른 전체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단위 : 억 원)

구분	협력형		독자형	병렬형	혼합형	전체
	공동	연계				
보호정책	- (-)	- (-)	0.1% (32)	0.0% (2)	0.4% (83)	0.5% (116)
적응정책	10.8% (2,545)	1.2% (277)	46.9% (11,006)	2.4% (562)	38.2% (8,956)	99.5% (23,347)
불리시정정책	- (-)	- (-)	- (-)	- (-)	- (-)	- (-)
총계	10.8% (2,545)	1.2% (277)	47.0% (11,006)	2.4% (563)	38.5% (9,039)	100.0% (23,463)

주: ( )는 금액

2) 건수기준

<부록 4-2-1> 정부 역할분담 및 정책목표별 분류에 따른 중앙부처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단위 : 개)

구분	협력형		독자형	병렬형	혼합형	전체
	공동	연계				
보호정책	- (-)	- (-)	1.8% (1)	- (-)	1.8% (1)	3.5% (2)
적응정책	12.3% (7)	- (-)	50.9% (29)	- (-)	33.3% (19)	96.5% (55)
불리시정정책	- (-)	- (-)	- (-)	- (-)	- (-)	- (-)
총계	12.3% (7)	- (-)	52.6% (30)	- (-)	35.1% (20)	100.0% (57)

주: ( )는 건수

<부록 4-2-2> 정부 역할분담 및 정책목표별 분류에 따른 지자체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단위 : 개)

구분	협력형		독자형	병렬형	혼합형	전체
	공동	연계				
보호정책	- (-)	- (-)	- (-)	0.3% (1)	- (-)	0.3% (1)
적응정책	21.2% (64)	16.6% (50)	37.4% (113)	23.8% (72)	0.3% (1)	99.3% (300)
불리시정정책	- (-)	- (-)	0.3% (1)	- (-)	- (-)	0.3% (1)
총계	21.2% (64)	16.6% (50)	37.7% (114)	24.2% (73)	0.3% (1)	100.0% (302)

주: ( )는 건수

<부록 4-2-3> 정부 역할분담 및 정책목표별 분류에 따른 전체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단위 : 개)

구분	협력형		독자형	병렬형	혼합형	전체
	공동	연계				
보호정책	- (-)	- (-)	0.3% (1)	0.3% (1)	0.3% (1)	0.8% (3)
적응정책	19.2% (69)	13.9% (50)	40.1% (144)	20.1% (72)	5.6% (20)	98.9% (355)
불리시정정책	- (-)	- (-)	0.3% (1)	- (-)	- (-)	0.3% (1)
총계	19.2% (69)	13.9% (50)	40.7% (146)	20.3% (73)	5.8% (21)	100.0% (359)

주: ( )는 건수

(5) 정부 역할분담 및 기능별

<부록 5-1-3> 정부 역할분담 및 기능별 분류에 따른 전체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단위 : 억 원)

1) 금액기준

<부록 5-1-1> 정부 역할분담 및 기능별 분류에 따른 중앙부처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단위 : 억 원)

기능	정책목표	협력형		독자형	병렬형	혼합형	전체
		공동	연계				
금융	- (-)	- (-)	- (-)	46.1% (9,901)	- (-)	34.6% (7,441)	80.7% (17,342)
마케팅	- (-)	- (-)	- (-)	0.6% (120)	- (-)	0.5% (103)	1.0% (223)
인력·교육	- (-)	- (-)	- (-)	1.7% (362)	- (-)	2.3% (495)	4.0% (857)
인프라	8.2% (1,774)	- (-)	- (-)	0.6% (127)	- (-)	0.5% (104)	9.3% (2,004)
혁신·기술	0.1% (20)	- (-)	- (-)	0.8% (178)	- (-)	4.1% (874)	5.0% (1,072)
총계	8.3% (1,794)	- (-)	- (-)	49.7% (10,687)	- (-)	41.9% (9,017)	100.0% (21,498)

주: ( )는 금액

<부록 5-1-2> 정부 역할분담 및 기능별 분류에 따른 지자체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단위 : 억 원)

기능	정책목표	협력형		독자형	병렬형	혼합형	전체
		공동	연계				
금융	- (95)	4.8% (95)	1.4% (226)	11.5% (344)	17.5% (28)	1.1% (22)	36.4% (715)
마케팅	- (25)	1.2% (25)	2.0% (44)	2.2% (61)	3.1% (40)	- (-)	8.6% (169)
인력·교육	- (8)	0.4% (8)	0.2% (12)	0.6% (77)	3.9% (4)	- (-)	5.1% (101)
인프라	- (586)	29.8% (586)	4.9% (66)	3.4% (76)	3.9% (96)	- (-)	41.9% (824)
혁신·기술	- (20)	1.0% (20)	5.6% (22)	1.1% (6)	0.3% (110)	- (-)	8.0% (157)
총계	- (733)	37.3% (733)	14.1% (370)	18.8% (563)	28.7% (277)	1.1% (22)	100.0% (1,965)

주: ( )는 금액

기능	정책목표	협력형		독자형	병렬형	혼합형	전체
		공동	연계				
금융	- (98)	0.4% (98)	0.1% (28)	43.2% (10,124)	1.5% (344)	31.8% (7,463)	77.0% (18,057)
마케팅	- (24)	0.1% (24)	0.2% (40)	0.7% (164)	0.3% (61)	0.4% (103)	1.7% (392)
인력·교육	- (8)	0.0% (8)	0.0% (4)	1.6% (373)	0.3% (77)	2.1% (495)	4.1% (957)
인프라	- (2,375)	10.1% (2,375)	0.4% (96)	0.8% (178)	0.3% (76)	0.4% (104)	12.1% (2,828)
혁신·기술	- (40)	0.2% (40)	0.5% (110)	0.9% (199)	0.0% (6)	3.7% (874)	5.2% (1,229)
총계	- (2,545)	10.8% (2,545)	1.2% (277)	47.0% (11,039)	2.4% (563)	38.5% (9,039)	100.0% (23,463)

주: ( )는 금액

2) 건수기준

<부록 5-2-1> 정부 역할분담 및 기능별 분류에 따른 중앙부처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단위 : 개)

기능	정책목표	협력형		독자형	병렬형	혼합형	전체
		공동	연계				
금융	- (-)	- (-)	- (-)	7.0% (4)	- (-)	8.8% (5)	15.8% (9)
마케팅	- (-)	- (-)	- (-)	3.5% (2)	- (-)	3.5% (2)	7.0% (4)
인력·교육	- (-)	- (-)	- (-)	14.0% (8)	- (-)	10.5% (6)	24.6% (14)
인프라	- (6)	10.5% (6)	- (-)	8.8% (5)	- (-)	3.5% (2)	22.8% (13)
혁신·기술	- (1)	1.8% (1)	- (-)	19.3% (11)	- (-)	8.8% (5)	29.8% (17)
총계	- (7)	12.3% (7)	- (-)	52.6% (30)	- (-)	35.1% (20)	100.0% (57)

주: ( )는 건수

<부록 5-2-2> 정부 역할분담 및 기능별 분류에 따른 지자체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단위 : 개)

기능 \ 정책목표	협력형		독자형	병렬형	혼합형	전체
	공동	연계				
금융	2.3% (7)	1.3% (4)	10.6% (32)	6.0% (18)	0.3% (1)	20.5% (62)
마케팅	4.3% (13)	7.6% (23)	11.3% (34)	6.0% (18)	- (-)	29.1% (88)
인력·교육	3.0% (9)	0.7% (2)	6.0% (18)	6.6% (20)	- (-)	16.2% (49)
인프라	10.6% (32)	5.0% (15)	5.3% (16)	3.6% (11)	- (-)	24.5% (74)
혁신·기술	1.0% (3)	2.0% (6)	4.6% (14)	2.0% (6)	- (-)	9.6% (29)
총계	21.2% (64)	16.6% (50)	37.7% (114)	24.2% (73)	0.3% (1)	100.0% (302)

주: ( )는 건수

<부록 5-2-3> 정부 역할분담 및 기능별 분류에 따른 전체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단위 : 개)

기능 \ 정책목표	협력형		독자형	병렬형	혼합형	전체
	공동	연계				
금융	1.7% (6)	1.1% (4)	10.3% (37)	5.0% (18)	1.7% (6)	19.8% (71)
마케팅	3.6% (13)	6.4% (23)	10.0% (36)	5.0% (18)	0.6% (2)	25.6% (92)
인력·교육	3.1% (11)	0.6% (2)	6.7% (24)	5.6% (20)	1.7% (6)	17.5% (63)
인프라	10.0% (36)	4.2% (15)	6.4% (23)	3.1% (11)	0.6% (2)	24.2% (87)
혁신·기술	0.8% (3)	1.7% (6)	7.2% (26)	1.7% (6)	1.4% (5)	12.8% (46)
총계	19.2% (69)	13.9% (50)	40.7% (146)	20.3% (73)	5.8% (21)	100.0% (359)

주: ( )는 건수

(6) 정책목표 및 기능별

1) 금액기준

<부록 6-1-1> 정책목표 및 기능별 분류에 따른 중앙부처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단위 : 억 원)

기능 \ 정책목표	보호정책	적용정책	불리시정정책	전체
금융	0.0% (31)	81.0% (17,312)	- (-)	81.0% (17,342)
마케팅	- (-)	1.0% (223)	- (-)	1.0% (223)
인력·교육	0.0% (83)	4.0% (774)	- (-)	4.0% (857)
인프라	- (-)	9.0% (2,004)	- (-)	9.0% (2,004)
혁신·기술	- (-)	5.0% (1,072)	- (-)	5.0% (1,072)
총계	1.0% (113)	99.0% (21,384)	- (-)	100.0% (21,498)

주: ( )는 금액

<부록 6-1-2> 정책목표 및 기능별 분류에 따른 지자체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단위 : 억 원)

기능 \ 정책목표	보호정책	적용정책	불리시정정책	전체
금융	- (-)	36.4% (715)	- (-)	36.4% (715)
마케팅	- (-)	8.6% (169)	- (-)	8.6% (169)
인력·교육	- (-)	5.1% (100)	- (-)	5.1% (101)
인프라	0.1% (2)	41.9% (823)	- (-)	41.9% (824)
혁신·기술	0.1% (1)	7.9% (156)	- (-)	8.0% (157)
총계	0.1% (3)	99.8% (1,962)	- (-)	100.0% (1,965)

주: ( )는 금액

<부록 6-1-3> 정책목표 및 기능별 분류에 따른 전체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단위 : 억 원)

정책목표 기능	보호정책	적용정책	불리시정정책	전체
금융	0.1% (31)	76.8% (18,026)	- (-)	77.0% (18,057)
마케팅	- (-)	1.7% (392)	- (-)	1.7% (392)
인력·교육	0.4% (83)	3.7% (874)	- (-)	4.1% (957)
인프라	0.0% (2)	12.0% (2,827)	- (-)	12.1% (2,828)
혁신·기술	0.0% (1)	5.2% (1,228)	- (-)	5.2% (1,229)
총계	0.5% (116)	99.5% (23,347)	- (-)	100.0% (23,463)

주: ( )는 금액

2) 건수기준

<부록 6-2-1> 정책목표 및 기능별 분류에 따른 중앙부처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단위 : 개)

정책목표 기능	보호정책	적용정책	불리시정정책	전체
인력.교육	1.8% (1)	14.0% (8)	- (-)	15.8% (9)
금융	- (-)	7.0% (4)	- (-)	7.0% (4)
혁신.기술	1.8% (1)	22.8% (13)	- (-)	24.6% (14)
마케팅	- (-)	22.8% (13)	- (-)	22.8% (13)
인프라	- (-)	29.8% (17)	- (-)	29.8% (17)
총계	3.5% (2)	96.5% (55)	- (-)	100.0% (57)

주: ( )는 건수

<부록 6-2-2> 정책목표 및 기능별 분류에 따른 지자체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단위 : 개)

정책목표 기능	보호정책	적용정책	불리시정정책	전체
금융	- (-)	20.5% (62)	- (-)	20.5% (62)
마케팅	- (-)	29.1% (88)	- (-)	29.1% (88)
인력·교육	- (-)	15.9% (48)	0.3% (1)	16.2% (49)
인프라	0.3% (1)	24.2% (73)	- (-)	24.5% (74)
혁신·기술	- (-)	9.6% (29)	- (-)	9.6% (29)
총계	0.3% (1)	99.3% (300)	0.0% (1)	100.0% (302)

주: ( )는 건수

<부록 6-2-3> 정책목표 및 기능별 분류에 따른 전체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단위 : 개)

정책목표 기능	보호정책	적용정책	불리시정정책	전체
금융	0.3% (1)	19.5% (70)	- (-)	19.8% (71)
마케팅	- (-)	25.6% (92)	- (-)	25.6% (92)
인력·교육	0.3% (1)	17.0% (61)	0.3% 1	17.5% (63)
인프라	0.3% (1)	24.0% (86)	- (-)	24.2% (87)
혁신·기술	- (-)	12.8% (46)	- (-)	12.8% (46)
총계	0.8% (3)	98.9% (355)	0.3% 1	100.0% (359)

주: ( )는 건수

(7) 정부 역할분담 및 생애주기별

<부록 7-1-3> 정부 역할분담 및 생애주기별 분류에 따른 전체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1) 금액기준

(단위 : 억 원)

<부록 7-1-1> 정부 역할분담 및 생애주기별 분류에 따른 중앙부처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단위 : 억 원)

생애주기	정책속성	협력형		독자형	병렬형	혼합형	전체
		공동	연계				
창업	-	-	-	1.2%	-	30.3%	31.5%
	(-)	(-)	(267)	(-)	(6,503)	(6,770)	
창업 및 성장	0.1%	-	0.2%	-	-	0.3%	
	(20)	(-)	(52)	(-)	(-)	(72)	
성장	8.2%	-	46.9%	-	10.7%	65.9%	
	(1,774)	(-)	(10,079)	(-)	(2,309)	(14,161)	
퇴로 및 안전망	-	-	1.3%	-	0.9%	2.3%	
	(-)	(-)	(290)	(-)	(204)	(494)	
총계	8.3%	-	49.7%	-	41.9%	100.0%	
	(1,794)	(-)	(10,687)	(-)	(9,017)	(21,498)	

생애주기	정책속성	협력형		독자형	병렬형	혼합형	전체
		공동	연계				
창업	-	0.1%	1.1%	0.1%	27.7%	29.0%	
	(-)	(14)	(268)	(14)	(6,503)	(6,799)	
창업 및 성장	0.1%	-	0.4%	0.3%	-	0.7%	
	(20)	(-)	(85)	(59)	(-)	(164)	
성장	10.6%	1.0%	44.3%	1.9%	9.8%	67.7%	
	(2,497)	(239)	(10,388)	(443)	(2,309)	(15,876)	
퇴로 및 안전망	0.1%	0.1%	1.3%	0.2%	1.0%	2.7%	
	(28)	(25)	(298)	(48)	(226)	(624)	
총계	10.8%	1.2%	47.0%	2.4%	38.5%	100.0%	
	(2,545)	(277)	(11,039)	(563)	(9,039)	(23,463)	

주: ( )는 금액

2) 건수기준

<부록 7-2-1> 정부 역할분담 및 생애주기별 분류에 따른 중앙부처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단위 : 개)

<부록 7-1-2> 정부 역할분담 및 생애주기별 분류에 따른 지자체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단위 : 억 원)

생애주기	정책속성	협력형		독자형	병렬형	혼합형	전체
		공동	연계				
창업	-	0.7%	0.0%	0.7%	-	1.4%	
	(-)	(14)	(1)	(14)	(-)	(28)	
창업 및 성장	-	-	1.7%	3.0%	-	4.7%	
	(-)	(-)	(33)	(59)	(-)	(92)	
성장	36.3%	12.2%	16.2%	22.6%	-	87.2%	
	(713)	(239)	(319)	(443)	(-)	(1,715)	
퇴로 및 안전망	1.0%	1.3%	0.8%	2.4%	1.1%	6.6%	
	(20)	(25)	(16)	(48)	(22)	(131)	
총계	37.3%	14.1%	18.8%	28.7%	1.1%	100.0%	
	(733)	(277)	(370)	(563)	(22)	(1,965)	

생애주기	정책속성	협력형		독자형	병렬형	혼합형	전체
		공동	연계				
창업	-	-	10.5%	-	5.3%	15.8%	
	(-)	(-)	(6)	(-)	(3)	(9)	
창업 및 성장	1.8%	-	7.0%	-	-	8.8%	
	(1)	(-)	(4)	(-)	(-)	(5)	
성장	10.5%	(-)	22.8%	-	24.6%	57.9%	
	(6)	(-)	(13)	(-)	(14)	(33)	
퇴로 및 안전망	-	-	12.3%	-	5.3%	17.5%	
	(-)	(-)	(7)	(-)	(3)	(10)	
총계	12.3%	-	52.6%	-	35.1%	100.0%	
	(7)	(-)	(40)	(-)	(20)	(57)	

주: ( )는 건수

주: ( )는 금액

<부록 7-2-2> 정부 역할분담 및 생애주기별 분류에 따른 지자체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단위 : 개)

생애주기 \ 정책속성	협력형		독자형	병렬형	혼합형	전체
	공동	연계				
창업	- (-)	0.3% (1)	0.3% (1)	1.3% (4)	- (-)	2.0% (6)
창업 및 성장	- (-)	- (-)	1.7% (5)	1.0% (3)	- (-)	2.6% (8)
성장	19.9% (60)	15.6% (47)	35.1% (106)	19.5% (59)	- (-)	90.1% (272)
퇴로 및 안전망	1.3% (4)	0.7% (2)	0.7% (3)	2.3% (7)	0.3% (1)	5.3% (16)
총계	21.2% (64)	16.6% (50)	37.7% (114)	24.2% (73)	0.3% (1)	100.0% (302)

주: ( )는 건수

<부록 7-2-3> 정부 역할분담 및 생애주기별 분류에 따른 전체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단위 : 개)

생애주기 \ 정책속성	협력형		독자형	병렬형	혼합형	전체
	공동	연계				
창업	- (-)	0.3% (1)	1.9% (7)	1.1% (4)	0.8% (3)	4.2% (15)
창업 및 성장	0.3% (1)	- (-)	2.5% (9)	0.8% (3)	- (-)	3.6% (13)
성장	17.8% (64)	13.1% (47)	33.7% (121)	16.4% (59)	3.9% (14)	85.0% (305)
퇴로 및 안전망	1.1% (4)	0.6% (2)	2.5% (9)	1.9% (7)	1.1% (4)	7.2% (26)
총계	19.2% (69)	13.9% (50)	40.7% (146)	20.3% (73)	5.8% (21)	100.0% (359)

주: ( )는 건수

(8) 정책목표 및 생애주기별

1) 금액기준

<부록 8-1-1> 정책목표 및 생애주기별 분류에 따른 중앙부처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단위 : 억 원)

생애주기 \ 정책목표	보호정책	적용정책	불리시정정책	전체
창업	- (-)	31.5% (6,770)	- (-)	31.5% (6,770)
창업 및 성장	- (-)	0.3% (72)	- (-)	0.3% (72)
성장	0.5% (113)	65.3% (14,048)	- (-)	65.9% (14,161)
퇴로 및 안전망	- (-)	2.3% (494)	- (-)	2.3% (494)
총계	0.5% (113)	99.5% (21,384)	- (-)	100.0% (21,498)

주: ( )는 금액

<부록 8-1-2> 정책목표 및 생애주기별 분류에 따른 지자체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단위 : 억 원)

생애주기 \ 정책목표	보호정책	적용정책	불리시정정책	전체
창업	- (-)	1.4% (28)	- (-)	1.4% (28)
창업 및 성장	- (-)	4.7% (92)	- (-)	4.7% (92)
성장	0.1% (1)	87.2% (1,713)	- (-)	87.2% (1,715)
퇴로 및 안전망	0.1% (2)	6.6% (129)	- (-)	6.6% (131)
총계	0.1% (3)	99.8% (1,962)	- (-)	100.0% (1,965)

주: ( )는 금액

<부록 8-1-3> 정책목표 및 생애주기별 분류에 따른 전체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단위 : 억 원)

정책목표 생애주기	보호정책	적용정책	불리시정정책	전체
창업	- (-)	29.0% (6,799)	- (-)	29.0% (6,799)
창업 및 성장	- (-)	0.7% (164)	- (-)	0.7% (164)
성장	0.5% (114)	67.2% (15,762)	- (-)	67.7% (15,876)
퇴로 및 안전망	0.0% (2)	2.7% (623)	- (-)	2.7% (624)
총계	0.5% (116)	99.5% (23,347)	- (-)	100.0% (23,463)

주: ( )는 금액

2) 건수기준

<부록 8-2-1> 정책목표 및 생애주기별 분류에 따른 중앙부처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단위 : 개)

정책목표 생애주기	보호정책	적용정책	불리시정정책	전체
창업	- (-)	15.8% (9)	- (-)	15.8% (9)
창업 및 성장	- (-)	8.8% (5)	- (-)	8.8% (5)
성장	3.5% (2)	54.4% (31)	- (-)	57.9% (33)
퇴로 및 안전망	- (-)	17.5% (10)	- (-)	17.5% (10)
총계	3.5% (2)	96.5% (55)	- (-)	100.0% (57)

주: ( )는 건수

<부록 8-2-2> 정책목표 및 생애주기별 분류에 따른 지자체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단위 : 개)

정책목표 생애주기	보호정책	적용정책	불리시정정책	전체
창업	- (-)	2.0% (6)	- (-)	2.0% (6)
창업 및 성장	- (-)	2.6% (8)	- (-)	2.6% (8)
성장	- (-)	89.7% (271)	0.3% (1)	90.1% (272)
퇴로 및 안전망	0.3% (1)	5.0% (15)	- (-)	5.3% (16)
총계	0.3% (1)	99.3% (300)	0.3% (1)	100.0% (302)

주: ( )는 건수

<부록 8-2-3> 정책목표 및 생애주기별 분류에 따른 전체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단위 : 개)

정책목표 생애주기	보호정책	적용정책	불리시정정책	전체
창업	- (-)	4.2% (15)	- (-)	4.2% (15)
창업 및 성장	- (-)	3.6% (13)	- (-)	3.6% (13)
성장	0.6% (2)	84.1% (302)	0.3% (1)	85.0% (305)
퇴로 및 안전망	0.3% (1)	7.0% (25)	- (-)	7.2% (26)
총계	0.8% (3)	98.9% (355)	0.3% (1)	100.0% (359)

주: ( )는 건수

(9) 정부 역할분담 및 정책대상별

1) 금액기준

<부록 9-1-1> 정부 역할분담 및 정책대상별 분류에 따른 중앙부처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단위 : 억 원)

정책대상	정책속성		독자형	병렬형	혼합형	전체
	공동	협력형				
소공인	-	-	46.8%	-	0.5%	47.3%
	(-)	(-)	(10,071)	(-)	(104)	(10,715)
소상공인	0.1%	-	1.5%	-	33.7%	35.2%
	(20)	(-)	(320)	(-)	(7,235)	(7,575)
슈퍼마켓 /나들가게	-	-	-	-	0.4%	0.4%
	(-)	(-)	(-)	(-)	(83)	(83)
예비창업자	-	-	0.3%	-	0.5%	0.8%
	(-)	(-)	(73)	(-)	(103)	(177)
전통시장	8.2%	-	1.0%	-	6.8%	16.1%
	(1,774)	(-)	(223)	(-)	(1,468)	(3,464)
프랜차이즈	-	-	-	-	0.1%	0.1%
	(-)	(-)	(-)	(-)	(25)	(25)
총계	8.3%	-	49.7%	-	41.9%	100.0%
	(1,794)	(-)	(10,687)	(-)	(9,017)	(21,498)

주: ( )는 금액

<부록 9-1-2> 정부 역할분담 및 정책대상별 분류에 따른 지자체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단위 : 억 원)

정책대상	정책속성		독자형	병렬형	혼합형	전체
	공동	협력형				
미용업	-	-	0.0%	-	-	0.0%
	(-)	(-)	(0)	(-)	(-)	(0)
소공인	0.0%	-	0.3%	-	-	0.4%
	(1)	(-)	(6)	(-)	(-)	(7)
소상공인	5.0%	1.6%	7.4%	21.5%	1.1%	36.6%
	(98)	(32)	(145)	(422)	(22)	(720)
숙박업	-	-	-	-	-	-
	(-)	(-)	(0)	(-)	(-)	(0)
슈퍼마켓 /나들가게	-	-	0.2%	0.0%	-	0.2%
	(-)	(-)	(4)	(0)	(-)	(5)
예비창업자	-	-	0.0%	0.7%	-	0.8%
	(-)	(-)	(1)	(14)	(-)	(15)
외식업	0.3%	-	8.1%	-	-	8.5%
	(6)	(-)	(160)	(-)	(-)	(166)
전통시장	31.9%	12.5%	2.7%	6.3%	-	53.4%
	(628)	(245)	(53)	(124)	(-)	(1,049)
제빵업	0.0%	-	-	-	-	0.0%
	(1)	(-)	(-)	(-)	(-)	(1)
프랜차이즈	-	-	0.0%	0.1%	-	0.1%
	(-)	(-)	(0)	(3)	(-)	(3)
총계	37.3%	14.1%	18.8%	28.7%	1.1%	100.0%
	(733)	(277)	(370)	(563)	(22)	(1,965)

주: ( )는 금액

<부록 9-1-3> 정부 역할분담 및 정책대상별 분류에 따른 전체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단위 : 억 원)

정책대상	정책속성		독자형	병렬형	혼합형	전체
	공동	협력형				
미용업	-	-	0.0%	-	-	-
	(-)	(-)	(0)	(-)	(-)	(-)
소공인	0.0%	-	42.9%	-	0.4%	43.4%
	(1)	(-)	(10,077)	(-)	(104)	(10,182)
소상공인	0.5%	0.1%	2.0%	1.8%	30.9%	35.4%
	(124)	(32)	(459)	(422)	(7,256)	(8,295)
숙박업	-	-	0.0%	-	-	0.0%
	(-)	(-)	(0)	(-)	(-)	(0)
슈퍼마켓 /나들가게	-	-	0.0%	0.0%	0.4%	0.4%
	(-)	(-)	(4)	(0)	(83)	(87)
예비창업자	-	-	0.3%	0.1%	0.4%	0.8%
	(-)	(-)	(74)	(14)	(103)	(191)
외식업	0.0%	-	0.7%	-	-	0.7%
	(6)	(-)	(160)	(-)	(-)	(166)
전통시장	10.3%	1.0%	1.1%	0.5%	6.3%	19.2%
	(2,413)	(245)	(264)	(124)	(1,468)	(4,514)
제빵업	0.0%	-	-	-	-	0.0%
	(1)	(-)	(-)	(-)	(-)	(1)
프랜차이즈	-	-	0.0%	0.0%	0.1%	0.1%
	(-)	(-)	(0)	(3)	(25)	(27)
총계	10.8%	1.2%	47.0%	2.4%	38.5%	100.0%
	(2,545)	(277)	(11,039)	(563)	(9,039)	(23,463)

주: ( )는 금액

2) 건수기준

<부록 9-2-1> 정부 역할분담 및 정책대상별 분류에 따른 중앙부처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단위 : 개)

정책대상	정책속성		독자형	병렬형	혼합형	전체
	공동	협력형				
소공인	-	-	8.8%	-	1.8%	10.5%
	(-)	(-)	(5)	(-)	(1)	(6)
소상공인	1.8%	-	31.6%	-	12.3%	45.6%
	(1)	(-)	(18)	(-)	(7)	(26)
슈퍼마켓 /나들가게	-	-	-	-	1.8%	1.8%
	(-)	(-)	(-)	(-)	(1)	(1)
예비창업자	-	-	8.8%	-	3.5%	12.3%
	(-)	(-)	(5)	(-)	(2)	(7)
전통시장	10.5%	-	3.5%	-	14.0%	28.1%
	(6)	(-)	(2)	(-)	(8)	(16)
프랜차이즈	-	-	-	-	1.8%	1.8%
	(-)	(-)	(-)	(-)	(1)	(1)
총계	12.3%	-	52.6%	-	35.1%	100.0%
	(7)	(-)	(30)	(-)	(20)	(57)

주: ( )는 건수

<부록 9-2-2> 정부 역할분담 및 정책대상별 분류에 따른 지자체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단위 : 개)

정책대상	협력형		독자형	병렬형	혼합형	전체
	공동	연계				
미용업	-	-	0.3%	-	-	0.3%
	(-)	(-)	(1)	(-)	(-)	(1)
소공인	0.7%	-	4.3%	-	-	5.0%
	(2)	(-)	(13)	(-)	(-)	(15)
소상공인	3.3%	2.0%	10.9%	9.3%	0.3%	25.8%
	(10)	(6)	(33)	(28)	(1)	(78)
숙박업	-	-	0.3%	-	-	0.3%
	(-)	(-)	(1)	(-)	(-)	(1)
슈퍼마켓 /나들가게	-	-	0.7%	0.3%	-	1.0%
	(-)	(-)	(2)	(1)	(-)	(3)
예비창업자	-	-	0.3%	1.3%	-	1.7%
	(-)	(-)	(1)	(4)	(-)	(5)
외식업	0.3%	-	14.2%	-	-	14.6%
	(1)	(-)	(43)	(-)	(-)	(44)
전통시장	16.6%	14.6%	6.3%	12.9%	-	50.3%
	(50)	(44)	(19)	(39)	(-)	(152)
제빵업	0.3%	-	-	-	-	0.3%
	(1)	(-)	(-)	(-)	(-)	(1)
프랜차이즈	-	-	0.3%	0.3%	-	0.7%
	(-)	(-)	(1)	(1)	(-)	(2)
총계	21.2%	16.6%	37.7%	24.2%	0.3%	100.0%
	(64)	(50)	(114)	(73)	(1)	(302)

주: ( )는 건수

<부록 9-2-3> 정부 역할분담 및 정책대상별 분류에 따른 전체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단위 : 개)

정책대상	협력형		독자형	병렬형	혼합형	전체
	공동	연계				
미용업	-	-	0.3%	-	-	0.3%
	(-)	(-)	(1)	(-)	(-)	(1)
소공인	0.3%	-	5.3%	-	0.3%	5.8%
	(1)	(-)	(19)	(-)	(1)	(21)
소상공인	2.5%	1.7%	14.8%	7.8%	2.2%	29.0%
	(9)	(6)	(53)	(28)	(8)	(104)
숙박업	0.3%	-	-	-	-	0.3%
	(1)	(-)	(-)	(-)	(-)	(1)
슈퍼마켓 /나들가게	-	-	0.6%	0.3%	0.3%	1.1%
	(-)	(-)	(2)	(1)	(1)	(4)
예비창업자	-	-	1.7%	1.1%	0.6%	3.3%
	(-)	(-)	(6)	(4)	(2)	(12)
외식업	0.3%	-	12.0%	-	-	12.3%
	(1)	(-)	(43)	(-)	(-)	(44)
전통시장	15.6%	12.3%	5.8%	10.9%	2.2%	46.8%
	(56)	(44)	(21)	(39)	(8)	(168)
제빵업	0.3%	-	-	-	-	0.3%
	(1)	(-)	(-)	(-)	(-)	(1)
프랜차이즈	-	-	0.3%	0.3%	-	0.8%
	(-)	(-)	(1)	(1)	(1)	(2)
총계	19.2%	13.9%	40.7%	20.3%	5.8%	100.0%
	(69)	(50)	(146)	(73)	(21)	(359)

주: ( )는 건수

(10) 정책목표 및 정책대상별

1) 금액기준

<부록 10-1-1> 정책목표 및 정책대상별 분류에 따른 중앙부처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단위 : 억 원)

기능	정책목표	보호정책	적용정책	불리시정정책	전체
소공인	-	-	47.3%	-	47.3%
	(-)	(-)	(10,175)	(-)	(10,175)
소상공인	0.1%	-	35.1%	-	35.2%
	(31)	(-)	(7,544)	(-)	(7,575)
슈퍼마켓 /나들가게	0.4%	-	-	-	0.4%
	(83)	(-)	(-)	(-)	(83)
예비창업자	-	-	0.8%	-	0.8%
	(-)	(-)	(177)	(-)	(177)
전통시장	-	-	16.1%	-	16.1%
	(-)	(-)	(3,464)	(-)	(3,464)
프랜차이즈	-	-	0.1%	-	0.1%
	(-)	(-)	(25)	(-)	(25)
총계	0.5%	-	99.5%	-	100.0%
	(113)	(-)	(21,384)	(-)	(21,498)

주: ( )는 금액

<부록 10-1-2> 정책목표 및 정책대상별 분류에 따른 지자체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단위 : 억 원)

기능	정책목표	보호정책	적용정책	불리시정정책	전체
미용업	-	-	-	-	-
	(-)	(-)	(-)	(-)	(-)
소공인	-	-	0.4%	-	0.4%
	(-)	(-)	(7)	(-)	(7)
소상공인	0.1%	-	36.5%	-	36.6%
	(3)	(-)	(718)	(-)	(720)
숙박업	-	-	-	-	-
	(-)	(-)	(-)	(-)	(-)
슈퍼마켓/나들가게	-	-	0.2%	-	0.2%
	(-)	(-)	(5)	(-)	(5)
예비창업자	-	-	0.8%	-	0.8%
	(-)	(-)	(15)	(-)	(15)
외식업	-	-	8.5%	-	8.5%
	(-)	(-)	(166)	(-)	(166)
전통시장	-	-	53.4%	-	53.4%
	(-)	(-)	(1,049)	(-)	(1,049)
제빵업	-	-	0.0%	-	0.0%
	(-)	(-)	(1)	(-)	(1)
프랜차이즈	-	-	0.1%	-	0.1%
	(-)	(-)	(3)	(-)	(3)
총계	0.1%	-	99.8%	-	100.0%
	(3)	(-)	(1,962)	(-)	(1,965)

주: ( )는 금액

<부록 10-1-3> 정책목표 및 정책대상별 분류에 따른 전체 예산 분포 현황(금액기준)

(단위 : 억 원)

기능	정책목표	보호정책	적용정책	불리시정정책	전체
미용업	-	-	-	-	-
		(-)	(-)	(-)	(-)
소공인	-	43.4%	-	-	43.4%
	(-)	(10,182)	(-)	(-)	(10,182)
소상공인	0.1%	35.2%	-	-	35.4%
	(33)	(8,261)	(-)	(-)	(8,295)
숙박업	-	0.0%	-	-	-
	(-)	(0)	(-)	(-)	(-)
슈퍼마켓 /나들가게	0.4%	0.0%	-	-	0.4%
	(83)	(5)	(-)	(-)	(87)
예비창업자	-	0.8%	-	-	0.8%
	(-)	(191)	(-)	(-)	(191)
외식업	-	0.7%	-	-	0.7%
	(-)	(166)	(-)	(-)	(166)
전통시장	-	19.2%	-	-	19.2%
	(-)	(4,513)	(-)	(-)	(4,514)
제빵업	-	0.0%	-	-	0.0%
	(-)	(1)	(-)	(-)	(1)
프랜차이즈	-	0.1%	-	-	0.1%
	(-)	(27)	(-)	(-)	(27)
총계	0.5%	99.5%	-	-	100.0%
	(116)	(23,347)	(-)	(-)	(23,463)

주 : ( )는 금액

2) 건수기준

<부록 10-2-1> 정책목표 및 정책대상별 분류에 따른 중앙부처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단위 : 개)

기능	정책목표	보호정책	적용정책	불리시정정책	전체
소공인	-	10.5%	-	-	10.5%
	(-)	(6)	(-)	(-)	(6)
소상공인	1.8%	43.9%	-	-	45.6%
	(1)	(25)	(-)	(-)	(26)
슈퍼마켓 /나들가게	1.8%	-	-	-	1.8%
	(1)	(-)	(-)	(-)	(1)
예비창업자	-	12.3%	-	-	12.3%
	(-)	(7)	(-)	(-)	(7)
전통시장	-	28.1%	-	-	28.1%
	(-)	(16)	(-)	(-)	(16)
프랜차이즈	-	1.8%	-	-	1.8%
	(-)	(1)	(-)	(-)	(1)
총계	3.5%	96.5%	-	-	100.0%
	(2)	(55)	(-)	(-)	(57)

주 : ( )는 건수

<부록 10-2-2> 정책목표 및 정책대상별 분류에 따른 지자체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단위 : 개)

기능	정책목표	보호정책	적용정책	불리시정정책	전체
미용업	-	-	0.3%	-	0.3%
	(-)	(-)	(1)	(-)	(1)
소공인	-	-	5.0%	-	5.0%
	(-)	(-)	(15)	(-)	(15)
소상공인	0.3%	-	25.5%	-	25.8%
	(1)	(-)	(77)	(-)	(78)
숙박업	-	-	0.3%	-	0.3%
	(-)	(-)	(1)	(-)	(1)
슈퍼마켓 /나들가게	-	-	1.0%	-	1.0%
	(-)	(-)	(3)	(-)	(3)
예비창업자	-	-	1.7%	-	1.7%
	(-)	(-)	(5)	(-)	(5)
외식업	-	-	14.6%	-	14.6%
	(-)	(-)	(44)	(-)	(44)
전통시장	-	-	50.0%	0.3%	50.3%
	(-)	(-)	(151)	(1)	(152)
제빵업	-	-	0.3%	-	0.3%
	(-)	(-)	(1)	(-)	(1)
프랜차이즈	-	-	0.7%	-	0.7%
	(-)	(-)	(2)	(-)	(2)
총계	0.3%	-	99.3%	0.3%	100.0%
	(1)	(-)	(300)	(1)	(302)

주 : ( )는 건수

<부록 10-2-3> 정책목표 및 정책대상별 분류에 따른 전체 예산 분포 현황(건수기준)

(단위 : 개)

기능	정책목표	보호정책	적용정책	불리시정정책	전체
미용업	-	-	0.3%	-	0.3%
	(-)	(-)	(1)	(-)	(1)
소공인	-	-	5.8%	-	5.8%
	(-)	(-)	(21)	(-)	(21)
소상공인	0.6%	-	28.4%	-	29.0%
	(2)	(-)	(102)	(-)	(104)
숙박업	-	-	0.3%	-	0.3%
	(-)	(-)	(1)	(-)	(1)
슈퍼마켓 /나들가게	0.3%	-	0.8%	-	1.1%
	(1)	(-)	(3)	(-)	(4)
예비창업자	-	-	3.3%	-	3.3%
	(-)	(-)	(12)	(-)	(12)
외식업	-	-	12.3%	-	12.3%
	(-)	(-)	(44)	(-)	(44)
전통시장	-	-	46.5%	0.3%	46.8%
	(-)	(-)	(167)	(1)	(168)
제빵업	-	-	0.3%	-	0.3%
	(-)	(-)	(1)	(-)	(1)
프랜차이즈	-	-	0.8%	-	0.8%
	(-)	(-)	(3)	(-)	(3)
총계	0.8%	-	98.9%	0.3%	100.0%
	(3)	(-)	(355)	(1)	(359)

주 : ( )는 건수

<부록-2> 내내역 사업 포함사업(2015년, 2016년)

□ 2015년 내내역사업 포함 선정사업(세부사업 2개, 내역사업 4개, 내내역사업 10개)

부처명	세부사업	내역사업	내내역
중기청	소상공인지원(용자)	소상공인성장기반자금	① 사업전환자금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① 일반경영안정자금
			② 긴급영업안정자금
			③ 임차보증금안심금융
	④ 전환대출 자금		
	소상공인 지원인프라	①소상공인 정보인프라 구축	① 소상공인증합정보시스템
			② 소상공인반송 운영
		③소상공인 네트워크 구축	①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② 전국소상공인대회
			③ 협력기반조성

□ 2016년 내내역사업 포함 선정사업(세부사업 3개, 내역사업 8개, 내내역사업 27개)

소관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내내역사업명
중기청	소상공인지원(용자)	①소상공인성장기반자금	① 소상공인창업자금
			② 소공인특화자금
			③ 사업전환자금
			④ 성장촉진자금
		②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① 일반경영안정자금
			② 긴급영업안정자금
			③ 임차보증금안심금융
			④ 소상공인 전환대출
	소상공인 창업지원	② 소자본 해외창업 지원	① 해외 인큐베이팅
			② 국내교육
			③ 해외창업 정보구축 등
		③ 신사업육성지원	①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및 보급
			② 신사업 사업화 교육
			③ 사업화지원
		④ 상권정보시스템 운영	① 상권분석 기능고도화
			② 시스템 유지보수
			③ 상권연구 등
			④ 상권DB 개방.공유
소상공인 지원인프라	①소상공인 정보인프라 구축	① 소상공인 포털 기능고도화	
		② 소상공인포털 운영□관리	
	②소상공인시장 정책조사.연구	① 소상공인시장 경동향 조사	
		② 이슈별 정책대응을 위한 조사연구	
		③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④ 불공정피해상담센터	
	③소상공인 네트워크 구축	①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② 전국소상공인대회	
		③ 협력기반조성	

